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인쇄/1998년 3월 3일

발행/1998년 3월 6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정세현

편집인/통일정책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3 팩시밀리 901-2544

© 민족통일연구원, 1998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31-1

4.500원

연구보고서 97-19

●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 형 중

민족통일연구원

요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위기에 직면한 '90년대 북한의 특징은 '개혁 없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고수, 개혁 불가라는 이데올로기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기정 사실화된 변화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적응해왔다. 앞으로도 북한은 '개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북한의 내부체제는 계속 변해갈 것이다.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수동적인 사후 적응도 계속될 것이다. 이 논문은 '90년대 북한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앞으로 북한 당국이 취할 정책의 기본방향과 북한 내부체제 변화 방향을 다루었다.

1.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대응

'90년대 경제난은 북한당국이 하부단위의 규율과 복종을 확보하는 중요한 도구였던 중앙관리경제와 국가배급체제를 붕괴시켰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공장·기업소, 공공기관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간부와 일반 주민에서 복종과 규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낮아졌다.

먼저 경제난 때문에 중앙권력은 각급 공장·기업소의 경영활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국가계획위원회 산하 중앙자재연합상사로부터의 자재공급체계가 붕괴했다. 중앙 자재공급 체계의 붕괴에 따라 북한 정부는 도·시·군의 지방행정 단위와 지방산업 공장들이 자구책을 모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각급 생산 및 지역 단위는 중앙의 지원없이도 원자재, 인민소비재, 식량 등을

부분적으로 자체 조달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90년대 경제난에 따른 국가적 외화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각급 단위의 자구책 모색의 일환으로써, 외화별이가 장려되었다. 북한은 '새로운 무역체계'를 도입하여 무역 전담부서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부서와 지방경제기관들도 무역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외화별이와 관련하는 기관과 인원, 그 수단과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각 생산 및 지역 단위는 생존을 위해서 독자적인 외화별이 사업을 구상하여, 각 개약진 식으로 대외무역에 뛰어들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은 그간 중간간부와 일반주민에 대한 가장 효율적 통제기구 중 하나였던 국가에 의한 소비재 및 식량의 독점적 배급체계를 붕괴시켰다. 배급제의 붕괴에 따라, 북한에서도 중앙계획기구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 부문의 경제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지역 및 계층 그리고 직업별로 차이는 있으나, 북한 주민은 식량을 포함한 생필품의 상당 부분을 비공식부문에서의 물물교환, 혹은 현금구입의 경로를 통해서 구입하고 있다.

국영 상업망·배급제의 붕괴와 암시장의 확산은 주민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국가로부터 받는 임금도 두가지 점에서 무의미해졌다. 먼저 공장 가동률이 저하되면서 정상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대부분 노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국정가격의 무용화, 암시장 인플레이션 때문이 국가가 지급하는 공식 임금은 거의 무의미해졌다. 국가가 일반 주민에게 최소한의 식료품마저도 보장해 주지 못하게 됨으로써 국가의 일반주민에 대한 통제, 일반주민의 국가에 대한 의존이 약화되고 있다. 마찬가지로의 이유에서 국가의 하부 행정단위에서 하급 간부와 일반주민의 상급 간부에 대한 의존성도 약화되고 있다.

암시장 인플레이와 국가임금의 의미 상실은 간부나 일반주민을 막론

하고 모든 계층의 실질임금감소를 뜻한다. 이는 모든 계층의 생활영위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모든 계층은 국가부문 이외에서 적극적으로 호구지책을 찾으려 강요받고 있다. 공식임금으로 생활이 불가능해진 간부는 공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패행위를 통하여 생활비를 조달해야만 한다. 노동자는 공장물건을 훔쳐 팔거나, 장사 등의 수단으로 공장노동 바깥에서 호구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모든 주민 계층이 국가적 규범과 규율에서 이탈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생활에 대한 국가 규제의 형해화, 공적 영역의 공동화(空洞化)가 심화되며, 그 결과로서 국가제도 체계의 기능효율이 현격히 저하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전반에서 정치·사회적 기강이 붕괴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 기강이완을 보면, 김일성·김정일의 절대성에 대한 회의 증대, 국가권위예의 도전, 벌목공, 유학생 등 외국 생활 경험자, 대학생, 대학교수 등을 중심으로 한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 증대, 체제비판적 낙서로부터 반체제 결사조직에 이르기까지 체제 저항적 행위의 출현, 사상체제와 사상교육 사업에 대한 회의적 태도의 증대 등이 나타난다. 비판적 분위기는 함경북도 지역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기강 이완 현상으로는, 절도 등 경범죄자의 증대, 가족해체와 사회적 한계계층의 증대, 매춘의 증대, 계층적 위화감의 발생, 여행의 증가, 미신의 증대 등이 나타난다.

북한은 '90년대 들어서 급증하고 있는 사회·정치적 기강이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왔다. 북한의 조치는 정치적 범죄, 일반형사범 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관련 사범에 대한 경고, 단속, 처벌 등의 강화에 집중해 있다. 북한은 우선 포고문, 특별지시문, 공개처형, 집단수용소예의 강제 수용 등을 통하여 '비사회주의 범죄'에 대처해왔다. 그와 함께 북한은 기존의 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

등의 정규공안조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러 형태의 비정규 공안조직을 신설·운영해왔다. 정규·비정규 보안조직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앙의 의지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 암시장에서의 가격폭등, 만연하는 부패상황에 보안요원들도 적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안기능을 담당하는 요원들도 자신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부패 행위에 참가하고 있다.

2. '90년대 변화의 특징과 전망

이미 '90년대에 위로부터 주도된 적극적 개혁은 없었지만, 북한은 계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앞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개혁'이라는 용어 사용을 회피하면서도 북한 당국은 기존의 빈화를 수용하는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현 집권 세력이 수동적 적응정책을 지속하며, 변화과정에 대한 통제능력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북한은 점진적인 체제전환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점진적 체제전환은 뚜렷한 마스터플랜에 기초하여 집권세력이 주도하고 통제하는 바의 목적의식있는 '개혁'의 과정이 아니라, 정권이 이미 기정 사실화된 경제변화와 상황에 대해 사후적으로 적응하는 가운데 연속적으로 미봉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가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향후 북한 당국의 정책은 '90년대에 일어난 변화를 수용하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수동적이고 적응적 성격을 가질 것이다. 북한 당국은 과거의 고전적 계획경제체제를 복원할 능력도, 역으로 전체 체제를 위로부터 대대적으로 개혁할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첫째, '90년대 경제난 때문에 계획경제체제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형해화되어 있다. 둘째, 경제난 때문에 북한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현저히 감소해 있으며, 국가제도체제의 기강도 상당

한 정도로 이완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향후 이러한 점을 감안한 수동적 적응정책을 통하여 정권안정과 경제회복을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수동적 적응정책은 원래 의도하지 않았으며 또한 통제하기도 힘든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재차 그러한 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은 중앙관리경제와 식량·소비재 국가배급의 구체제를 전면적으로 복원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주요 국가 기간 산업, 권력 유지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하는 주요 특권계층에 대한 배급 체제는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국가 관리정책을 상당한 정도로 후퇴시킬 것이다. 국가와 기업소간의 관계에서는 과거의 전면적 통제정책으로부터 기업소 경영에 대한 부분적 통제정책으로 후퇴할 것이다. 지방 행정 관청의 자율성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일반 주민에 대한 식량·소비재 공급은 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 관계에 위임할 가능성이 많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이미 관행화된 것을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경제에 대한 국가통제력의 지속적 이완과 국가로부터 비교적 자율적인 경제활동의 급속한 확산을 초래할 것이다.

'90년대 사회분야 변화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새로운 계층 구조의 발생이다. 앞으로 북한에서 시장관계가 확산되면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이다. 일반주민 사이에 빈곤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암시장 활동에서 성공한 자, 부패를 통해 재산을 증식한 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암시장 경제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90년대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다양한 경제적 유인을 해 정치적 지배집단은 새로운 경제적 특권집단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간부가 부

패 행위를 통해서 정치행정적 권력을 경제적 자산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 현상이다. 자산가로 변신해가는 간부 층은 시장적 과정에 더욱 깊숙히 참여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시장 지향적 체제개혁에 옹호하는 세력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북한의 정치·사회적 기강을 지속적으로 이완시킬 가능성이 많다. 이미 국가 행정체계 내부에서 상당한 분권화가 발생했으며, 관료의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국경무역의 증대, 벌목공, 유학생 등에 의한 외부의 정보 유입이 증대하고 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북한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안기구를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대내 정치적으로 과거와 같은 '유일체제'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배급 체계가 붕괴된 상태에서 대부분의 간부는 부패를 통해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 주민도 국가재산 절취와 장사를 통해서만 생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난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며, 이 때문에 북한에 광범한 사회적 한계집단이 발생하며, 사회적 이탈행위가 만연하는 것은 근절될 수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 당국의 핵심적 사항 중의 하나는 변화과정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앞으로도 공안통치를 통해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권력 상층부의 단결을 토대로 북한 당국은 대내 정치적 안정을 위하여 군사통치방식과 집단수용소, 공개처형 등의 테러적 수단의 사용, 개인송배와 사싱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기존의 정치관계와 특권체계를 유지시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면서, 경제적 차원에서의 효율성 향상을 부차적 목표로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경제 성장, 그리고 주민 생활의 향상과 연계되면 얼마간 성공할 수 있다. 정치적 불만은 경제적 성공을

통해서 무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동적 적응정책 기조 위에서 북한체제는 점진적으로 시장적 권위주의 정권으로 변화해 갈 수도 있다. 북한은 계획경제에 점차적으로 시장적 요소를 확대·도입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려 노력하지만, 정치적 차원에서는 독재체제의 그 어떤 완화도 거부하는 정책을 취할 것이다. 시장관계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성공은 한편에서는 국가 재정수입 확대, 주민 생활 개선을 통해서 국가 통제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발할 것이다. 시장관계의 증대에 따라 간부부패가 더욱 증대하며, 대외 사조의 유입이 확대되고, 일반 주민의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약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의 가능성이 증대한다. 만약 북한의 수동적인 적응정책이 수반하는 정치·사회적 불안정 가능성이 통제되지 못할 때 북한 내부에서 유혈 조치를 수반한 심각한 정치적 소요 또는 상층 엘리트 내부의 갈등에 따른 정변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목 차 —

제I장 서론	1
제II장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대응	5
1. 중앙관리경제의 위기와 대응	6
가. 계획체제의 기능상실	6
나. 지방 행정단위·기업소의 자구책 모색	9
다. 외화벌이의 다양화와 통제	10
라. 국가 배급체제의 붕괴와 비공식경제의 확산	17
2. 국가임금의 의미상실과 각 계층의 대응	24
가. 간부	25
나. 일반 노동자	30
다. 군인	34
라. 청소년	35
3. 정치·사회적 통제력의 약화와 중앙정부의 대응	37
가. 정치적 기강의 이완	38
나. 사회적 기강의 이완	42
다. 중앙정부의 대응	47
제III장 '90년대 변화의 특징: 수동적 적응	58
1. 각 분야별 특징과 전망	59
가. 정치	59
나. 경제	61
다. 사회	64

2. 수동적 적응의 역동성	67
가. 점진적 체제전환의 가능성	67
나. 국가권력의 이완과 지도체계의 분권화	70
다. 정치적 통제능력의 약화	73
제IV장 결 론	77
참고문헌	81
최근 발간자료 안내	87

제 I 장 서 론

'90년대 북한은 내외적 위기에 직면했다. '80년대말 '90년대초 사이에 구소련·동유럽의 사회주의가 붕괴함에 따라,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되었다. '90년 이래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왔으며, 해마다 100만톤 내외의 곡물을 수입하고서도 식량난은 해결되지 않았다. 북한핵을 둘러싼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94년에는 김일성이 사망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는 북한당국의 정책은 이렇다할 새로운 면모를 보이지 않은 채, 과거의 지속성상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북한은 주체사상의 연속성상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필승불패'론,¹⁾ '사회주의 과학'론²⁾ 등을 주장해 오고 있다. 북한의 내부정치는 지도자에 대한 개인숭배 작업의 강화, 사상사업의 강조, 대내외적 위기감의 고조 등 과거의 연속성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오랜 동안 지속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도 북한은 실효성있는 개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종래의 경제관리방식을 고수한 가운데 북한은 '93년 이후 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를 정책목표로 내세우면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본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김일성 사후 '유혼통치'를 내세운 김정일은 '3년상'을 끝내고, '97년 당총비서

1)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참조.

2)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11.1; 김정일은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은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변질시킨 기회주의의 파산을 의미한다. 사회주의는 기회주의에 의하여 일시 가슴아픈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과학성,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재생되고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2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직에 추대되었다.

그러나 '90년대 위기는 북한의 경제관리실태와 사회정치적 상황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우선 경제난 때문에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계획경제체제가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국가는 계획경제체제를 통하여 산하 기업소와 지방행정단위를 지배해 왔었다. 그러나 이제 국가는 기업소와 지방행정단위에 대하여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배급제의 붕괴, 장마당에서의 인플레이 때문에 거의 모든 주민 계층은 국가배급과 국가임금에 의존해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간부는 부패로, 노동자는 직장이탈과 장사로 대응하고 있다. 그 여파로 북한의 국가행정체계가 광범한 마비상태에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주체사상에 대한 회의와 불평 불만이 늘어나면서 정치적 기강이 이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절도 등 경제적 경범죄, 부랑자, 청소년 범죄, 매춘 등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기강 이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90년대 북한의 특징은 개혁없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고수, 개혁 불가라는 이데올로기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개혁없는 변화'는 중앙정부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주도한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묵인할 수 밖에 없었던 수동적 적응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동적 적응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것과 유사한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북한은 사실상의 광범한 분권화 현상을 묵인했을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장려했다. 자원한계와 경제혼란때문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축소되었으며, 지방정부와 기업소의 자율성이 사실상 확대되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소비재와 식량에 대한 배급제가 사실상 폐기되었으며, 이 분야

에서 시장관계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90년대 북한의 변화를 보면,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적 수사 및 공식천명된 정책 목표,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일어난 내부체제 변화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향후 북한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구분은 중요하다. 이데올로기와 공식 목표가 내부 정치·경제·사회 상황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와 공식 정책에 의해서만 북한 내부 체제의 변화가 결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 동안 북한에서는 당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으며, 당국은 이러한 변화에 계속 사후적으로 적응해 왔다. '90년대에도 북한당국은 내부체제의 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미 일어난 변화에 대하여 묵인정책을 취해왔다. 앞으로 북한체제의 변화에서도 당국의 의도와 정책 목표는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이미 일어난 변화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적응하는 수동적 성격을 가질 것이다.

이 글의 주제는 '90년대 북한에서 일어난 변화가 앞으로 북한 당국의 정책방향 그리고 체제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 글은 향후 북한 당국이 구체제를 복원한다거나, 또는 대대적인 개혁정책을 통해 주도적으로 체제를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90년대에 일어난 변화를 점진적으로 수용하고 대응하는 수동적 적응정책을 취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이 글은 또한 수동적 적응정책도 원래 의도하지 않았으며 또한 통제하기도 힘든 상당히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이에 대해 북한당국은 지속적으로 적응해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

이 글의 제II장은 북한의 공식문헌, 탈북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4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90년대 내부체제의 위기와 변화를 서술한다.³⁾ 제Ⅲ장은 과거의 추세를 기초로, 앞으로 북한 당국이 취할 정책의 기본 방향과 북한 내부 체제의 변화 방향을 다룬다.

3) 탈북자 증언은 민족통일연구원에서 1995~1997년 사이에 이루어진 총 52명의 면담자료와 북한문제연구소가 출간하는 월간 자료 「최근북한실상」 1991년 8월호부터 1997년 12월호, 「중앙일보」에 1995년 1월 20일부터 4월 13일에 걸쳐서 연재된 기획기사 “아! 북녘 동포” 및 월간 잡지 「통일한국」에 1996년 2월부터 1997년 12월에 걸쳐 총 21회 연재되었던 기획기사 “귀순자 생접대담” 과 기타 신문, 잡지의 기사 등을 비교·검토하여 이용하였다.

제Ⅱ장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대응

북한체제는 정권 성립 이후 조직과 운영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왔으며, 북한 당국은 여러 조치를 통해서 이에 대응해 왔다.

북한당국의 목표는 체제의 효율성 향상과 정치적 안정이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북한 당국은 하부단위를 보다 완전하게 감시하고 장악하여 중앙의 의지가 하부에서 일사불란하게 관철되도록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항상 장애에 직면했다. 그 이유는 권력중앙-중간간부-일반주민 사이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았고, 거대한 관료조직 내 각 세포간의 조율과 실적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또한 체제의 실적 능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었기 때문이었다. 북한 당국이 하부 단위에 규율과 복종을 강요하고,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한 자원과 수단을 얼마나 보유했으며,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90년대 북한의 경제난은 북한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수단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역사에서 '90년대의 사태발전은 중요한 변화를 뜻한다. 먼저 경제난 때문에 권력 중앙에 집중되는 경제잉여의 양이 축소됨에 따라, 중앙관리경제를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재정과 자원이 고갈되었다. 국가가 공장·기업소, 그리고 간부와 주민에게 그 경영과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국가는 공장·기업소, 간부와 주민 등의 일상활동을 과거와 같은 수준에서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국가부문 바깥에서 비공식 경제가 광범하게 확산되었으며, 새로운 취업기회와 소득원이 발생했다. 또한 암시장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계위기는 모든 계층이 적극적으로 국가부문 바깥에서 부수입을 올리도록 강요하고 있다.

6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이러한 상황은 북한당국의 하부 장악 능력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국가 내부에서의 복종과 규율의 관계, 간부와 일반 주민 사이에서의 복종과 규율의 관계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북한당국의 중간간부층에 대한 통제능력이 감소되었다. 경제쇠퇴에 따라 국가의 자원공급 능력이 제한됨으로써 북한당국이 중간간부의 특권을 보장해 주는 한편, 그를 통해 복종과 규율을 확보하는 체계가 붕괴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간부의 일반주민에 대한 보상과 처벌 능력이 약화됨으로써, 공장·기업소, 공공기관, 주거 지역 등에서 간부의 일반주민에 대한 복종과 규율유지 능력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1. 중앙관리경제의 위기와 대응

가. 계획체제의 기능상실

북한 '계획경제'의 두 축은 첫째, 공업생산부분에서의 '계획의 세부화' 원칙이며, 둘째로 주민에 대한 소비품 공급에서의 국영상업망을 통한 사실상의 배급제이다. 계획의 세부화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제활동과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세부에 이르기까지 맞물리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⁴⁾ 세부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최소 전제는 분업관계에 있는 모든 생산부문에서 조업과 자재수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전제가 다소간 지켜진 '정상적인 시기'에도, 인민경제계획의 불완전성 때문에 세부화 원칙은

4) 사회과학출판사 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경제리론헤설」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61~71.

실현되지 못했다.⁵⁾ '90년대 북한의 경제난은 이러한 세부화 원칙을 완전히 형해화시켰다.

북한의 경제이론은 계획경제의 균형을 위해서는 '인민경제 선행부문'이 다른 부문의 발전을 위한 근본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원료, 연료, 동력생산과 수송이 앞서서 발전해야만 다른 부문의 자재보장, 협동생산, 수송이 보장될 수 있다고 한다.⁶⁾ 그런데 북한 기초에너지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생산량이 '90년 3,315만 톤에서 '96년 2,100만톤으로 계속 하락했다. 원유도입도 '90년의 252만톤에서 '96년에는 94만톤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발전량도 '90년 277억킬로와트로부터 '96년 213억킬로와트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⁷⁾ 이러한 북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부진은 다른 연관산업의 연쇄적인 부진을 초래했다.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량의 비율로 계산한 북한의 공장가동율은 '90년 평균 40%에 달했으나, '96년에 와서 평균 25% 수준으로 하락했다. 각 제조업 부문별로 보면, 철강부문 가동율은 56.6%에서 20.2%로, 자동차부문은 36.4%에서 25.7%로, 시멘트부문은 51.0%에서 31.5%로, 화학비료 부문은 45.2%에서 27.2%로, 직물 부문은 29.4%에서 22.1%로 각각 하락했다.⁸⁾

공장율의 가동 저하는 북한의 핵심 중공업 공장에 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내 '천리마 공장'이라고 일컫는 강선 제강소는 중앙

5) 박형중,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문화,"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참조.

6) 리기성,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사회주의 경제의 전반적 영역에서 작용하는 경제 법칙과 범주」 제1권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92), p. 358.

7) 한국은행, 「북한 GNP 추정결과」, 각년도 참조; 유류난 및 전력난이 실제 공장 운영과 주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증언은 "유류난 심각," 「중앙일보」, 1995.4.4 참조.

8) 김영운, "북한에너지난의 실상과 전망,"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 37.

8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고위층 인사의 방문 등 특별한 경우에만 파철을 모아 수출용 제품만 생산한 채 완전 가동 중단상태이다. 대안 중 7 계공장도 외국인이 방문할 때만 잠깐씩 가동하고 있다. 김책제강소 및 청진제철소도 코크스의 부족으로 가동율이 20%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군수공장 가동율도 30%에 불과하다는 증언도 있다. 전면적인 가동을 저하에 따른 극심한 물자부족 때문에 절대적인 김일성 교시가 이행되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심지어 공장·기업소 지배인이 김일성 앞에서 서약서를 쓰고 주석 책임비서가 직접 시행을 감독하는 일부 '주석폰드' 기업까지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났다.⁹⁾

결과적으로, '90년대 이후 국가계획위원회 산하 중앙자재연합상사로부터의 자재공급체계가 붕괴했다. 그 이후 자재조달은 각 공장·기업소의 자체해결에 맡겨지고 있다. 기업소와 노동자는 필수적인 자재나 원료를 직접 조달해야 한다.¹⁰⁾ 자재 자체 조달에서 기업소 지배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지배인이 얼마나 뛰느냐에 따라 계획성과가 결정되고 있다. 지배인은 뇌물, 물물교환 등을 통하여 자재를 조달한다.¹¹⁾ 따라서 국가계획위원회의 운영이 마비되고 계획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¹²⁾ 이렇게 되면, 중앙권력이 각급 공장·기업소의 경영활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하

9) 정기해(기업소 직장장), 1995.4.18 면담자료;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22호 (1994.4), pp. 1, 31~32; 황장엽은 “군수공장은 자강도에 많은데 이곳에도 9~10개월씩 식량배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95년 고급 기술자 “2000여명이 굶어죽었다”고 말하고 있다. 「조선일보」, 1997.11.13.

10) 고청송(자강도 강계 혁명사적지 보존사업소 지도원), 1997.7.11 면담자료; 여만철에 따르면, 대안의 사업체계는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마비상태에 빠지기 시작해 '80년대 말에 급격히 쇠퇴했다. 공장·기업소는 '92년경부터 자재의 10~20%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체조달해야 하는 상태에 빠졌다. 여만철(노동자), 1996.7.13 면담자료.

11) 서남일(4급기업소 지배인), “계획은 없다. 흥정을 잘해야 공장이 산다.” 귀순자재점대담 5, 「통일한국」(1996. 6월호), pp. 84~88.

12) 여만철(노동자), 1996.7.13 면담자료.

부 경제 단위의 자립화 경향과 계획외적 비공식 활동의 증대 즉 계획외적 자재확보 경쟁, 생산된 경제잉여의 상부예의 인도 거부 및 자의적 처분 등의 경향이 증대하게 된다.

결국 '90년대 북한당국은 하부 경제단위가 생산과 투자 그리고 분배를 위한 최소한의 자원도 공급할 수 없었다. 북한당국은 다른 뚜렷한 대안없이, 각 공장·기업소에게 투자재원의 자체조달을 원칙으로 하는 '증산과 절약 투쟁'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급 공장·기업소가 은행빚을 내어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각급 공장·기업소는 규모 및 가동율에 따라 최하 5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빚을 안고 있다.¹³⁾

나. 지방 행정단위·기업소의 자구책 모색

중앙 자재공급 체계의 붕괴에 따라 북한 정부는 도·시·군의 지방 행정 단위와 지방산업 공장들이 자구책을 모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¹⁴⁾ 북한당국은 각급 생산 및 지역 단위는 중앙의 지원없이도 원자재, 인민소비재, 식량 등을 부분적으로 자체 조달하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군(郡)과 지방산업공장은 각각 200정보와 50정보 이상씩 자체 원료기지를 확보해야 했다.¹⁵⁾ 각 기관은 각 지방의 특색에 맞는 식료품 생산공장을 건설했다. 이 공장들은 주민들이 철

13) 공장가동율이 저하되면, 독립채산제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북한의 공장·기업소는 노임을 지불할 수 없게 된다. 김정일은 '92년초 '국가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정상노임의 60퍼센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각 공장·기업소에서는 은행에서 빚을 내어 노임을 지불하고 있다. 내외통신사, 「북한실상 종합자료집」, (서울: 내외통신사, 1995), p. 270.

14) 손철준,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 「경제연구」, (1992년 2호), pp. 15~17.

15) 「민주조선」, 1994.5.8.

따라 산과 들에서 채취한 도토리, 머루, 다래 등을 원료로 간장, 된장, 묵 등 부식과 단물, 술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피복 생산공장에서는 의류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찌투리없애기 운동과 옷감 재단시 1센티미터 절약운동 등을 전개했다. 각급 기관·기업소 등은 자체의 부업농장과 터밭 등을 운영하여, 이곳에서 생산된 감자, 밀, 보리 등의 잡곡과 채소로 식량을 충당하며, 일부는 장마당 등지에 내다 팔아 필요한 생필품을 구하고 있다.¹⁶⁾

이러한 경향은 특히 경공업 부문의 육성과 관련한 조직개편, 군(郡)의 자립성 강화, 그리고 지방산업 육성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과거 경제계획에 따라 원자재와 에너지 등을 지방에 할당해 왔다. 그러나 외환부족에 따른 수입 감소, 중앙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지방에 재정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은 최근 군(郡)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북한은 군의 자립성 향상을 위해 군이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서 무역을 포함한 상업활동은 물론 임금도 군의 수입에 따라 독자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¹⁷⁾ 특히 '90년대 초부터 「정춘실 운동」을 장려하면서, 원재료의 조달, 상품의 생산 및 대외무역에 이르는 분야까지 군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군의 자립성을 강조하고, 부족한 원재료, 생필품 공급 애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 외화벌이의 다양화와 통제

'90년대 경제난에 따른 국가적 외화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16) "국교생, 방과후 벌레잡기전투 동원," 「중앙일보」, 1995.4.11;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29호 (1994.11), pp. 15~16.

17) 「조선시보」, 1996.8.29.

각급 단위의 자구책 모색의 일환으로 외화벌이가 장려되었다. 그에 따라 외화벌이와 관련된 기관과 인원, 그 수단과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북한은 '90년대 초부터 '새로운 무역체계'를 도입하여 대외경제위원회는 물론, 각 위원회, 부, 도 등도 무역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새로운 무역체계는 대외경제위원회에서 하는 국가무역과 도행정경제위원회에서 하는 지방무역체제로 구성된다. 그 주요 특징은 "생산자들이 대외무역을 직접하게 하는 무역체계와 방법"으로서 "생산을 담당한 위원회, 부들과 도행정경제위원회들에서 무역관리부서와 무역회사를 두고 자기부문, 자기 지방에서 생산한 수출품들을 직접 내다 팔고 필요한 제품들을 직접 사다 쓰게 하는 무역체계와 방법"18)이다.

외화벌이는 국가와 당의 주요 기관 및 생산과 지역단위별로 조직된 외화벌이 사업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무원 대외경제위원회와 중공업부, 경공업위원회, 화학부, 국가체육위원회, 당기관 가운데 조선노동당, 중앙당의 39호실, 제2경제위원회, 중공업부, 사로청과 그 밖에 중앙인민위원회, 사회안전부, 인민무력부, 평양시당 등이 각각 한 개에서 수개의 외화벌이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다.19)

이들 중앙 주요기관의 외화벌이 사업체 이외에도 지방에도 각 기관·기업소 별로 외화벌이 사업체가 조직되어 있다. 특히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당국이 외화벌이 사업을 통해서 배급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촉구하면서부터 각 지방별, 기관별, 기업소별로 외화벌이 사업

18) 리신효,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특징과 그 우월성," 「경제연구」, 1992년 제4호, p. 30.

19) 북한 무역상사 및 관련기관 목록은 동용승·서양원, 「남북경협」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5), pp. 83~124 참조.

소가 난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진시의 경우 외화벌이 사업소가 군부대 50개소, 안전부 10개소, 보위부 3~4개소, 호위국·시당·청년동맹 각 1개소 등 국가기관 외화벌이 사업소가 130~140개소에 달한다. 또한 각 기업소·공장들도 외화벌이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가짜 사업소도 존재한다.²⁰⁾

북한은 매년 초 외화벌이사업 '금액지표'를 책정하여 당·정·군 기관에 하달하여 외화벌이 사업을 독려하고 있다.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소가 해체되거나 문책을 받기 된다.²¹⁾ 주요 외화벌이 품목은 사금, 아연, 철광석, 석탄 등 광산물 송이버섯, 아편 등 농산물과 명란젓, 성게알, 해삼, 실뱀장어 등 수산물, 그리고 골동품 등등이다.²²⁾ 중앙의 당정기관 외화벌이 사업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중앙당 39호실은 중앙당이 당자금 마련을 위해 설치한 외화벌이 전담부서이다.²³⁾ 이 기관은 외화획득의 일환으로 산하 대성은행을 통해 '90년도부터 '재부증권(財富證券)'을 발행하여, 자력 있는 귀국자를 대상으로 구입을 종용하고 있다. 또한 중앙당 39호실은 그동안 금과 은을 여타 외화벌이 상사에서 일절 취급치 못하도록 하고 독점해 왔다. 39호실은 '90년 들어 수익성이 높은 송이버섯, 아연까지 추가 독점조치를 취하였다. 각 도당 39호실은 이들 제품에 대한 해당 도별 수매권을 장악하여, 여

20)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67호 (1998.1), p. 13.

21) 이정국(조선인민군 제838호 관리소 무역과장), 1997.5.22 면담자료.

22) 배인수(외화벌이 사업소 운전수), "외화벌이사업 과열로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귀순자 쟁점대담 8, 「통일한국」, (1996년 9월호), p. 78; 「중앙일보」, 1995.1.24.

23) "장교후보생 동원 수출용 조개잡이," 「중앙일보」, 1995.1.24; 내외통신사, 「북한실상종합자료집」, pp. 104~105;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28호 (1994.10), pp. 1~2; 140호 (1995.10), pp. 3~4.

타 무역상사에서 제품확보 자체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 ② 노동당은 대도시 동 단위는 물론 지방 군단위에 이르기까지 외화상점·식당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²⁴⁾ 그 목적은 귀국자들이 해외교포 친척들로부터 송금받아 소지하고 있는 돈과 외화벌이 종사자들이 사업 도중 일부 착복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거둬들이기 위해서이다. 이는 '92년 일부 축소되었다가, '93년부터 다시 확대 실시되고 있다.
- ④ 이밖에도 북한은 외화획득을 위해 정무원을 중심으로 아편재배와 가공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39호실, 국가보위부, 인민무력부, 시·도 행정기관 등도 참여하고 있다.²⁵⁾ 인민무력부와 정무원의 외화벌이 사업체는 '92년 중반부터 '93년 9월까지 중고자동차 약 3만대를 수입하여 그중 2만대 정도를 중국 밀매상인에게 판매했다.²⁶⁾ 북한 당국은 또한 산하 외화벌이 사업소를 독려하여 골동품을 수집, 수출하고 있다.²⁷⁾

24) 외화상점은 '78년 평양시 한곳에 처음 등장했으며 그 이후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조명철, 「북한가격정책의 현황과 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p. 64; 군수분야를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평양시 중구역 소재 외화 전용의 창광상점 등에서는, 군수품공장에서 군수품을 생산하고 남은 자재를 이용한 인민생활필수품도 판매되고 있다.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29호 (1994.9), p. 22; 114호 (1993.8), pp. 20~22.

25) “장교후보생 동원 수출용 조개잡이,” 「중앙일보」, 1995.1.24;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21호 (1994.3), pp. 21~22; 117호(1993.11), p. 21; 128호 (1994.10), p. 15; 130호 (1994.12), p. 24.

26) “화폐교환,” 「중앙일보」, 1995.1.26;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28호 (1994.10), pp. 18~19.

27) 오명선(신의주 일용품 협동조합 자재인수원), “형식은 사회주의, 내용은 자본주의와 같다.” 귀순자 쟁점대담 7, 「통일한국」, (1996년 8월호), p. 90; 내외통신사, 「북한실상종합자료집」, pp. 98~100; 골동품 장사는 개인에 의해 서도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박철만(잠업검역소 지도원), 95.12.7 면담 자료.

이렇게 획득된 외화는 해당 국가기관에 귀속된다.²⁸⁾ 그러나 지방의 행정단위, 공장·기업소들이 자체로 벌어들인 외화는 자체 필요 충족을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도단위 외화벌이 사례를 보면,

경작지가 적은 함경북도는 식량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자체 해결책을 강구했다. 그 주요 대처 방안을 보면, ① 어획되는 명태를 일질 주민에게 공급하지 않고 중국으로 수출하여 쌀이나 옥수수를 구입하거나, ② 각급 공장·기업소 유희노동자들에게 하루 5그루의 나무를 해오면 하루 일과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재를 확보, 전량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식량을 구입하며, ③ 청진시 나남구역 은덕동에서 나오는 도자기용 점토를 일본에 수출하여 심각한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유류를 수입한다.²⁹⁾

시·군급 지방행정경제위원회에서는 파철, 고철 등을 수집하여 중국에 수출하고 대신 식량을 구매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장기계를 해체하여 식량과 교환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1991년 11월부터 1992년 5월까지 북한 신의주시와 중국 단둥시는 파철과 밀가루를 교환했다. 이 사업에서 총 20대의 차량이 하루 3~4차례 단둥시를 왕래하여 파철을 수송하고, 동차

28) 이정국(조선인민군 제838호 관리소 무역과장), 1997.5.22 면담자료;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00호 (1992.6), p. 6.

29) 도단위 기관끼리 직거래 현상도 관찰된다. 함경북도는 1993년 10월 4개월 동안 식량 공급이 지연되자, 2차례에 걸쳐 직격 배를 동원하여 황해남도 해주에서 벱단체 곡식을 들여와 탈곡하여 공급하기도 했다.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30호 (1994.12), p. 23.

량이 밀가루를 신고 복귀했다. 이 사업에는 신의주시 인접 군에 서도 참가했다. 당시 파철 수집을 위하여, 인민반, 학교, 공장·기업소 등에 할당량을 임의 배정함에 따라 공장·기업소에서는 사용 가능한 골재 분리기, 방적기계, 선반기까지 폐기 처분하는 사례가 허다했다.³⁰⁾

중소규모의 기관·기업소들은 노임·원자재 문제 등을 자체 해결하기 위하여 '부업' 명목의 비공식 외화벌이 사업을 펼치고 있다. 중소규모 기관·기업소들은 독립된 외화벌이 사업체를 조직하지 않으면서 외화벌이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할당된 일정 목표액의 외화를 국가에 귀속시킬 의무를 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남포 상업관리소는 유휴인력을 동원, 46정보의 부업밭을 개간하여 고구마·땅콩·옥수수 등을 재배하거나 염소 등을 사육하여 기존의 국영상점운영 사업 이외의 돈벌이를 하고 있다.³¹⁾

북한의 군대와 노동적위대도 외화벌이 사업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³²⁾ 군단에 1개 대대(1,000명)의 '군인외화벌이돌격대'가 별도 편성되어 광산, 수산사업소, 집단농장 등지에서 외화벌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외화벌이 대대는 외화가 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수집하여 군단 산하 무역회사를 통해서 수출한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토끼·고양이·물쥐 가죽이나 오리털 등 축산물과 버섯·고사리·오미자 등 한약재 및 아편 등 농산물, 그리고 조개·명태·명란 등 수산물이다. 노동적위대에서도 연 15일간의 훈련기간을 이용하여 적위대원들에게 외화벌이 사업을 시키고 있다. 적위대원은 훈련기간중 고

30)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21호 (1994.3), p. 23.

31)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22호 (1994.4), p. 19.

32) 내외통신사, 「북한실상종합자료집」, p. 103.

사리 등 산나물을 채취하여 수매후 '외화수매증'을 발급받아 훈련확
인서와 교환하고 있다. 이밖에도 단위부대별로 독자적으로 외화벌이
에 나서고 있는데, 사례를 보면,

- ① 남포시 용강군 소재 군부대인 425훈련소 362여단은 1개중대를
조개잡이에 동원, 기존 별도의 독립된 외화벌이 사업체라면 거
쳐야 하는 인민무력부 외화벌이 창구인 '매봉상사'를 통하지 않
고 생산된 조개의 자체 판로를 개척하여 외화벌이를 하는 한편
월 흑백 TV 1대를 받는 조건으로 군용트럭과 운전수를 임대하
고 있다.
- ② '94년 1월부터 국경지역 군부대에서는 부대 일부를 군사기술 교
류명목으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등지에 직접 내보내 외화벌이
를 하고 있다. 이들은 농번기에는 러시아 농장에서 농사일을
하며, 농한기에는 공사장 잡일을 하고 있고, 장사에도 개입하고
있다.³³⁾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행정구역별, 생산단위별로 달리 나타나고 있
다. 외국과 교역할 수 있는 물품을 보유한 행정구역이나 생산단위는
상대적으로 식량사정이 좋은 편이다. 또한 신³⁾역체계에 의해서 허용
된 다양한 무역집단의 실무자들은 대외무역에서 전반적인 국가경제
적 이익에 대한 고려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창출과 자기이익
이라고 하는 '분위주의적'이고 사적인 이해에 더 집착하는 경향이 나
타나고 있다.³⁴⁾

33)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41호 (1995.11), p. 7.

34) 배인수, "외화벌이 사업 과열로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참조: 전홍택·김상
기, 「북한경제의 현황과 개혁전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7), pp. 29~

'90년대 중반 북한당국은 무분별한 외화벌이 사업의 추진으로 초래된 각종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실적이 부진한 사업소를 해산하는 등의 대폭적인 사업소 정리조치를 취했다.³⁵⁾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밀거래꾼들이 개설한 것으로서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 간판만 유지하고 있는 사업소를 폐지했다. ㉡ 군부대의 경우에도 사단·여단 등 각 단위별로 있던 사업소를 해체시키고, 후방총국에서 관리하는 '군상관리소' 외화벌이 사업소 산하에 군단별로 1개소씩만 사업소를 설치했다. ㉢ 군단 '25부'(총책 정치부장) 산하에 국가 지원없이 외화벌이 사업소를 개설하여 '39호실'을 지원하도록 했다. ㉣ 국가 1·2급 기업소에서는 자체 '무역과'를 조직, 국가의 합법적 단위를 통해서만 외화벌이 사업을 하도록 했다. ㉤ 함경북도·양강도·평안북도 등 3개도에만 '변강무역과'를 설치하여 타도에서는 반드시 이곳을 경유해야만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

라. 국가 배급체계의 붕괴와 비공식경제의 확산

과거 중간간부와 일반주민에 대한 가장 효율적 통제기구 중의 하나는 소비재 및 식량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 배급체계였는데, 이것이 경제난으로 인해 붕괴되었다. 배급제의 붕괴에 따라, 북한에서도 중앙계획기구의 통제를 받지않는 비공식 부문의 경제행위³⁶⁾가 늘어나

30; 이종석, 「북한의 경제난 실태와 전망」 (성남: 세종연구소, 1996), pp. 19, 21, 31.

35) 이정국(조선인민군 제838호 관리소 무역과장), 1997.5.22 면담자료.

36) 서방의 연구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바깥에 존재하는 사적 경제행위를 지칭하는 보다 일반적 용어는 2차경제(the second economy)이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군수경제부문이 제2경제라고 불리우고 있다. 따라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비공식경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국가에 의해서 허용된 농민시장은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주요한 공간의 하나이다. 그런데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 중에는 국가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고 있다. 지역 및 계층 그리고 직업별로 차이는 있으나, 북한 주민은 식량을 포함한 생필품의 상당 부분을 비공식부문에서의 물물교환, 혹은 현금구입의 경로를 통해서 구입하고 있다.³⁷⁾ 국가가 일반 주민에게 최소한의 식료품 마저도 보장해주지 못하게 됨으로써 국가의 일반주민에 대한 통제, 일반주민의 국가에 대한 의존이 약화되고 있다. 마찬가지로의 이유에서 국가의 하부 행정단위에서 하급 간부와 일반주민의 상급 간부에 대한 의존성도 약화되고 있다.

북한에서 '90년대 들어서 비공식부문이 급성장한 이유는 특히 식량 배급체계의 붕괴때문이다. 북한에서는 '92년부터 '하루두끼먹기운동'이 시작되었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92~'93년경부터 식량배급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고,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더욱 악화되었다.³⁸⁾ 이에 따라 텃밭, 뚝배기 등에서 생산한 식량과 식료품 등에 대한 사적 거래가 급속히 증가했다. 비공식 부문에서는 거의 모든 종류의 식품과 소비재가 거래되고 있다. 식품류로서 쌀,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등, 피복류로서 양복지, 체육복, 운동화 등, 생필품으로서 비누, 화장품, 안경, 신발 등, 내구소비재로서 텔레비전, 라디오, 냉장고, 자전거, 재봉틀, 녹음기 등이 거래되고 있다.³⁹⁾ 이에 따라 국가의 주민이

허용된 합법적 행위와 그렇지 않은 불법적 행위가 있다. 여기서 후자의 경우에 암시장, 암거래, 암시세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이러한 개념과 관련된 여러 논쟁점과 문헌소개에 관해서는 전홍택, "북한 제2경제의 성격과 기능," 「통일경제」, (1997년 2월) 참조.

- 37) 이해영(시베리아 석탄연합기업소 노동자)은 소맥·식료 부문에서 공식경제대 비공식경제의 비중을 1:10으로 평가한다. 1986.6.28 면담자료; 비공식경제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여러 현상에 대해서는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5) 참조.
- 38) 최수영, "북한 식량난의 실상과 전망,"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참조.
- 39) 거래품목과 가격 등에 관해서는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30호 (1994.12), pp. 13~15 참조; 조명철, 「북한가격정책의 현황과 방향」, pp. 39~70 참조.

등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면서 원자재와 소비재, 식량을 구하기 위한 사회적 이동이 증가했으며, 비공식 부문의 상품이동도 활성화되었다. 농민시장의 개설 주기와 장소, 거래품목 등에 대한 국가규제가 무의미해졌다.⁴⁰⁾ 주류 등 거래금지 품목도 배급 중단 상황에서 장마당 거래가 묵인되고 있다.⁴¹⁾

농민시장에의 식료품 주공급원은 텃밭, 돼기밭 등의 소토지 경작이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서 식량사정이 더욱 어려워지자, 주민들은 주로 일과후 야간을 이용하여 소토지를 일구어 식량난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함경북도의 경우 산간지역의 농장원들은 300~1000평 정도, 중소도시의 읍·노동자구 주민들은 50~100평 정도의 소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소토지에서는 협동농장 동일면적의 3배 이상이 수확되고 있다. 농촌주민들은 소토지에 강냉이·콩 등을 재배하여 수확물을 공산품과 교환하고 있다. 도시주민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기업소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빼들리거나 국경지역에서 중국인 장사꾼 등을 통해 구매한 물품을 가지고 농촌에 들어와서 식량과 교환하고 있다. 이때 물품의 가치척도는 강냉이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있다. 함경북도 온성군에서는 강냉이 1킬로그램을 북한돈 10원 정도로 환산하고 있다.⁴²⁾

농민시장에서의 주요 거래품목은 일용공산품이다. 공산품 거래량은 농산품 거래량의 수십배에 이른다.⁴³⁾ 그런데 거래 공산품 중 80% 정

40) 농민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중에서 농축산물, 여러 가지 약재, 농수산물가공품, 공예품, 부업공산품 등은 당국의 거래승인품목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영기업에서 생산되는 일체의 소비적 공산품이나 식료품, 수산물, 알곡류 등의 거래는 거래불허 품목에 속한다. 또한 의화상절 물품, 해외에서 들어온 물품도 장마당 거래금지 품목에 속한다. '93년부터 농민시장에서 미국판매가 허가되었다. 조명철, 「북한가격정책의 현황과 방향」, pp. 53~54.

41) 최승찬(개성 석비레 벽돌공장 자재인수원), 1997.5.9 면담자료.

42) 최동철(4·25 담배농장 농장원), 1996.7.1 면담자료;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45호 (1996.3), pp. 12~15.

43) 조명철, 「북한가격정책의 현황과 방향」, pp. 52, 54.

도는 생산기관 및 유통과정에서 유출된 것이다. 공산품은 생산기관에서 간부와 노동자들에 의해서 유출되거나, 유통과정 중에서 간부가 국정가격으로 구입하여 암거래상을 통해 빼들려진다. 나머지는 훔친 물건, 뇌물 등을 통해서 공급된다. 식료품 공장, 신발공장, 장공장(간장·된장), 양정사업소(쌀도정·배분), 화장품 공장 등 생필품을 생산하는 공장·기업소에서는 간부, 노동자가 생산물품을 유출한다.⁴⁴⁾ 이밖에도 공산품은 여러 경로로 장마당에 흘러들어 온다.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안전모, 장갑 등 보급품을 내다판다. 또한 각종 기계부품을 몰래 훔쳐다 그대로 팔거나, 공장에서 훔친 자재를 원료로 집에서 간단한 기계를 조립하여 장마당에 내다 판다. 공장 인근 주민들은 공장 자재의 일부를 유출하여 '가내 샅가공'으로 기공하여 판매한다.⁴⁵⁾ 북한의 '인민소비품'은 상업부의 중앙도매소, 직도의 출하도매소, 지역별 지구도매소, 시·군 상업관리소를 거쳐 일선 상점에 공급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인민소비품' 중에서 공급카드를 통해서 판매되는 배정품이 아닌 자유판매품은 유통과정에서 80% 정도가 유출되어 약 20%만 일선 상점에 도달한다. 상점에 도착한 상품마저도 상품 판매원이 국정가격과 암거래 가격의 차익을 노려, 상품을 정상 판매한 것처럼 조작하고 뒤로 빼내 농민시장 등을 통해서 암거래하고 있다.⁴⁶⁾

국가는 농민시장을 묵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0일 주기로 개장되던 전통적인 농민시장은 '93년 초반에서 중반 사이 상설시장화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특히 신의주, 회령 등 국경도시, 함흥, 청진 등 항구도시에는 농민시장이 상품

44) 최호영(시베리아 벌목사업소 통역원), 95.12.8 면담자료;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38호 (1995.8), pp. 6, 12; 141호 (1995.11), p. 10.

45)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35호 (1995.5), p. 1; 141호 (1995.11), p. 9; 138호 (1995.8), p. 11.

46) 내외통신사, 「북한실상종합자료집」, pp. 69-70.

및 시장 규모 면에서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국가가 공식 허용한 농민시장은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 상업과에 소속된 시장 관리원에 의하여 관리된다.⁴⁷⁾ 이들은 시장에 허가된 매장을 대여하고 시장관리비와 장세(좌판의 크기에 따라 2~15원)를 받고 있으며, 금지된 품목의 거래를 단속한다. 나아가 시장관리소는 상품유통과정에 개입하여 시세차익을 남긴다. 장사 때문에 출근율이 낮아지자, 북한 당국은 인민반별로 가두매대를 할당하여 공동판매하도록 조치했다.⁴⁸⁾ 또한 북한 당국은 '87년 이후 자영 가내수공업 형태인 가내반 운영, 그리고 협동식당운영 등에 대하여 이윤의 5%를 세금으로 걷고 있다.⁴⁹⁾

나아가 국영기관이 농민시장에 적용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농민시장관리사업소는 '93년 3월 그동안 엄격히 단속하던 입쌀과 옥수수쌀의 판매를 허용했다. 장마당 전체 상인의 20% 정도가 미곡만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쌀의 출처는 식량사정이 원활한 농민, 군부대 사관장, 경리지도원, 창고장 등을 통해서 유출된 것이다.⁵⁰⁾ 정무원 인민봉사위원회는 '92년 봄 평양시 만경대 구역에 광복백화점을 새로 개관했다. 질 좋은 제품을 제공한다는 취지아래 합영생산한 제품과 중국산 물품만 취급하면서, 국정가격이 아닌 농민시장에서의 가격을 적용했다.⁵¹⁾ 북한은 식료종합 수매 상점을 통하여 채소, 과일, 육류 등을 개인으로부터 수매받아 도시에 공급하고자 했다. 그러나

47) 이종석, 「북한의 경제난 실태와 전망」, p. 20;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30호 (1994.12), pp. 12~15.

48) 이 밖에도 북한은 중국 훈춘과 나진·선봉특구를 연결하는 원정교 주변에 외국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제 자유 시장을 개설했다. 「한겨레신문」, 1997.6.3 참조.

49) 여만철(노동자), 1996. 7.13 면담자료.

50)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30호 (1994.12), p. 13; 125호 (1994.7), p. 28.

51)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31호 (1995.1), pp. 8~9.

국정 수매가격과 농민시장가격의 차이때문에 농민들은 국가수매를 기피하고 농민시장에 물품을 공급했다. 이에 일부 군(郡)은 자체적으로 수매가격을 높임으로써, 국가수매를 늘리고자 시도하고 있다.⁵²⁾ 또한 북한이 '96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분조관리제」도 초과생산분을 분조원에게 직접 배정하여 농민시장에의 곡물공급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⁵³⁾

북한 주민은 북한화폐보다는 외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농민시장 가격의 폭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 원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을 통해서 일반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를 휴지로 만들어 버릴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92년 7월 15일 단행된 화폐개혁에서 북한당국은 구화폐의 일부만 신화폐로 교환해주고 나머지는 은행에 강제 저축시키거나 아예 교환해 주지 않았다.⁵⁴⁾

이 때문에 일부 북한 주민은 달러나 엔, 금이나 보석 등을 비축하고 있다.⁵⁵⁾ 일반주민들은 한·만 국경을 왕래하며 장사하는 중국 조선족 등 국경 밀무역자들에게 공식환율보다 높은 암시세로 북한돈을 달러나 엔으로 교환하여 외화를 모으고 있다. 달러당 암시세는 공식환율의 40~50배로서, 1달러가 거의 노동자 한달 월급(80~1백원)의

52) 박철호(김화군 식료수매사업소 수매원), “국가재정 미비로 수매가격 지불 못 한다.” 귀순자정점대담 11, 「통일한국」(1996년 12월호), p. 53; 이와는 반대로 국가의 강제수매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식량부족이 장기화되면서 '94년초 함경남북도, 양강도 지역의 식량배급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식량사정이 최악의 사태에 이르자 이들 3개도를 제외한 타지역 일반주민들에게 1인당 5kg의 미곡을 국정가격으로 국가에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군인 및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여유식량을 국가에 수매하도록 했다.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32호 (1995.2), p. 8; 133호 (1995.3), p. 15.

53) 전홍택·김상기, 「북한경제의 현황과 개혁전망」, p. 24.

54) 내외통신, 「내외통신종합판(46) (1992.7.1-12.31)」(서울: 내외통신, 1993), pp. 223~226.

55) 최승찬(개성 석비레 벽돌공장 자재인수원), 1997.5.9 면담자료.

가치를 지닌다.⁵⁶⁾ 국경 밀무역자들은 북한돈으로 중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한 명태, 사금 등을 구입하고 있다.⁵⁷⁾

암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자본주의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는 전문거꾼의 등장이다. 이들은 물건매매시 흥정을 붙이고 이익을 챙긴다. 주민들은 외화만 있으면 이들을 통해 비공식적 방법으로 냉장고, 재봉틀, TV 등 대부분의 물건을 구할 수 있다.⁵⁸⁾ 생필품의 만성적 부족현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외화상점에서는 어떤 상품이나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외화의 암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고리 사채업자도 등장하고 있다. 외화벌이 사업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 밀무역자는 물론 기관·기업소의 외화벌이 종사자들이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북송교포, 화교 등을 중심으로 사채대금업이 등장했다. 사채이자는 일정하게 정해진 바는 없으나 연 10~20% 수준이다.⁵⁹⁾ 암거래를 위한 패거리도 등장했다. 평상시에는 구성원들이 각자 소속공장에서 신발 등의 생필품을 빼내와 장마당에 내다 판다. 금이나 골동품 같은 큰 장사거리가 생기면 구성원 전체가 역할을 분담, 중국 등지에 밀거래를 한다. 패거리 현상은 매우 광범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등중학교(13~14세)부터 패거리에 가담하고 있으며, 젊은 사람치고 패거리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 여러 패거리들은 상호 공존관계를 형성하여 결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변보호와 장물 처분을 위

56) 1달러는 공식적으로 외화와 바꾼 돈표 1.5원이지만, 암시세는 달러당 60~75원이다. "외화판치는 '주체의 나라,'" 「중앙일보」, 1995.1.20;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43호 (1996.1), p. 11; 나진의 원정리 공동시장에서는 달러당 200원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김호림, "‘사라요’ 소리 울려 퍼지는 나진·선봉 장마당," 「통일한국」 (1997년 11월호), p. 73.

57) "화폐교환," 「중앙일보」, 1995.1.26;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22호 (1994.4), pp. 28~29.

58) "장교후보생 동원 수출용 조개잡이," 「중앙일보」, 1995.1.24;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90호 (1991.8), p. 8.

59) 내외통신사, 「북한실상종합자료집」, p. 227.

해 안전원, 보위부원, 군부대와도 공생관계를 유지한다.⁶⁰⁾

2. 국가임금의 의미상실과 각 계층의 대응

국영 상업망과 배급제의 붕괴, 그리고 암시장의 확산은 주민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국가로부터 받는 임금은 두 가지 의미에서 무의미해졌다. 먼저 전력난과 자재난 등으로 공장 가동율이 낮아지면서 정상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대부분 기본노임(월평균 노동자 임금은 80~100원 정도)의 30~40% 정도만 수령하고 있지만, 이도 체불되거나 물건으로 지불될 때가 많아지고 있다.⁶¹⁾ 둘째, 국가배급의 중단에 따른 국정가격의 무용화, 암시장 가격의 폭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때문이 국가가 지급하는 공식임금은 거의 무의미해졌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정가격이 8천인 쌀 1kg의 농민시장 가격은 25원, 국정가격이 6천인 옥수수는 15원이다. 1달에 50kg 정도의 식량이 필요한 3~4인 가족의 경우 쌀로는 1,250원, 옥수수로서는 750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에서 노동자의 공식임금 80~100원은 가족의 식량만을 구입하는 비용의 10%⁶²⁾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보잘 것 없다. 부족 생계비=장사, 가족사육, 밀주

60) "주먹세계," 「중앙일보」, 1995.2.23; 내외통신사, 「북한실상종합자료집」, pp. 152~153.

61) "국교생,방과후 벌레잡기전투 동원," 「중앙일보」, 1995.4.11; 김정일은 1992년 초 '국가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정상노임의 10퍼센트를 유지하라고 지시한 바있다.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32쪽 (1995.2), p. 13.

62) 그런데 공장가동율이 낮아서 노동자가 위의 평균임금이하만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비율은 실제 더욱 낮다. 김연철이 조사한 8명의 탈북자의 경우, 공식월급을 완전히 받았을 것으로 가정하여 1달 공식월급과 1달 실질가족생계비의 백분율을 계산하면, 최저 0.6퍼센트에서 최고 12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들 탈북자의 1달 임금은 60~145원, 1달 실질 생계비는 1,000~20,000원에 사이에 분포해 있다. 김연철,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p. 22.

등의 행위를 통해 조달되어야 한다.

식량·소비재 국가 배급 체계의 붕괴, 암시장 인플레이에 따른 국가임금의 가치상실은 북한 모든 계층의 생활영위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생존방식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과거에 국가는 모든 계층의 주민에 대해 식량·소비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여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했다. 국가는 이러한 독점 공급권을 정치적 기준에서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중간간부의 협력과 규율을 유지했으며, 주민을 지배하고 통제했다. 그러나 경제난에 따라 국가의 공급능력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간부와 주민에 대한 통제 수단과 능력도 저하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식량·소비재 보급 능력의 저하와 암시장 인플레이는 간부나 일반주민을 막론하고 전체 주민에게 엄청난 실질임금 감소를 야기했다. 모든 주민은 더 이상 자신의 생활을 국가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됨으로써, 국가부문 이외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호구지책을 찾도록 강요받고 있다. 공식임금만으로 생활이 불가능해진 간부는 공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패행위를 통해 생활비를 조달해야만 한다. 노동자는 공장물건을 훔쳐 팔거나, 장사 등을 통해 공장노동 바깥에서 호구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모든 주민이 국가적 규범과 규율에서 이탈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생활에 대한 국가 규제의 형해화, 공적 영역의 공동화(空洞化)가 심화됨으로써, 국가제도 체계의 현격한 기능저하가 나타나고 있다.

가. 간부

식량·소비재에 대한 국가공급체계의 붕괴와 암시장 인플레이에 대하여 간부들은 직권을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방식의 광범한 부패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외화벌이 종사자의 중간 착복

북한은 군부대를 포함한 각급 기관·기업소·학교 등 각 단위별 외화벌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외화벌이 종사자들은 외화벌이 사업에서 획득한 외화를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고 중간에서 착복하여 개인의 부를 축적하고 있다. 외화를 착복하는 방법으로는 단위 외화벌이 사업체 책임자와 연계하여 할당된 목표의 초과분을 아예 보고하지 않거나 목표액 미달시 실제 획득 금액 이하로 허위보고하여 그 차액을 착복한다. 또한 소속 외화벌이 사업체의 물품을 가로챌 후 다른 외화벌이 사업체에 판매하거나, 수출계약은 국정가격에서 체결하되 수입측 상대방으로부터 뇌물을 받는다.⁶³⁾

(2) 중간간부의 직권 남용

간부부패는 경제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한 '30년대 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⁶⁴⁾ 기업소 지배인은 종업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며, 공장 원자재와 설비,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상품, 공장 생산품 등을 암시장에 유통하여 사적 이득을 취한다.⁶⁵⁾ 기타 중간간부들은 밀거래자와 벌목공 등 해외파견자의 직장이동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수수한다. 이러한 뇌물 비용은 직장의 생산물품이나 자재 등을 절취하여 판매한 수입으로 조달되며, 특히 외화는 최고의 뇌물로 간주된다. 중간간부는 밀거래자와 연계하여 편의를 봐주면서 사례금을 받기도 하고,

63) “장교후보생 동원 수출용 조개잡이,”; 내외통신사, 「북한실상종합자료집」, p. 97;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38호 (1985.8), p. 5.

64) 박성철(대안 중기계 노동자), 1996.7.3 면담자료; 고청송(노동자), 1996.7.11 면담자료.

65) 김대호(남포지구 수산외화벌이 원천채취 대대장), 95.4.14 면담자료.

자신들이 직접 암거래에 참가하기도 한다.⁶⁶⁾

중간간부의 직권남용과 뇌물수수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⁶⁷⁾

- 직장결근: 노동자가 장사를 위하여 결근을 원할 경우, 월 300원 정도면 한달간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 기록부에 출근한 것으로 기록된다.
- 통행증: 거리 및 여행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00원에서 2000원 정도면 통행증 발급이 가능하다. 신의주-회령은 2,000원, 함흥-평양은 1,200원, 함흥-국경지방은 500원 정도이다. 사회안전부에서 통행증을 강매하는 사례도 있다.
- 평양이주: 지방주민도 미화 4천 달러면 평양이주가 가능하다.
- 중국방문: 4년에 한차례 친척 방문에 한해 허용되나 미화 2천 달러면 언제나 가능하다.
- 중국이주: 중국 연고자는 미화 5만달러면 신분을 화교로 조작하여 이주할 수 있다.
- 대학진학: 북송자 자녀의 경우에도 일화 500만엔이면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
- 직장배치: 북한 화폐 500원 정도(산업공장 300원, 대외봉사부문 1,000원)면 일이 편하고 외화를 만질 수 있는 직장에 배치받을 수 있다.
- 입당: 미화 200달러면 입당이 가능하다.

66) 이정국(조선인민군 제838호 관리소 무역과장), 1997.5.22 면담자료; 북한문제 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38호 (1995.8), p. 7; 148호 (1996.6), p. 20.

67) 내외통신사, 「북한실상종합자료집」, pp. 169~170; “식량부족으로 풀린 여행제한,” 「중앙일보」, 1995.1.21.

- 보위부원 신분증 대여: 미화 100달러, 또는 바꾼돈 200원이면 1개월간 대여가 가능하다.
- 무죄조치: 절도범은 북한화폐 700원, 살인범은 일화 2만엔이면 무죄처리된다.
- 훈장수여: 콩기름 10톤, 돼지고기 3,000킬로그램이면 3급 국기훈장을 받을 수 있다.
- 자동차 면허증: 북한화폐 1,000원 (군대내의 경우 600원)이면 2급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여러 직업 중에서도 뇌물 수뢰나 작은 이익이 있는 국가 직책이 인기를 얻고 있다.⁶⁸⁾

- 산림감독원: 이들은 탄광에서 갱목으로 사용할 나무의 벌목을 허가하고 주민들의 땀감 마련을 위한 도벌을 무마하면서 뇌물을 받는다.
- 수의사: 이들은 소·돼지 등에 가짜 진단서를 발급하여 도축할 수 있게 해 주면서 뇌물을 받는다.
- 분주소안전원(파출소 순경): 주민들이 식량획득을 위해 무단 여행을 하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묵인하면서 뇌물을 받는다. 여행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다.

68) 송문홍, "사회주의요? 파 썩은 뇌물천국이야요," 『신동아』 (1994년 2월호) 참조;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03호 (1992.9), pp. 25~27; 125호 (1994.7), pp. 17~23; 143호 (1996.1), pp. 6~11; 38호 (1995.8), p. 6; 141호 (1995.11), pp. 4~5; 153호 (1996.11), p. 22; 143호 (1996.6), p. 17; 136호 (1995.6), pp. 8~9; 146호 (1996.4), p. 9;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주택배정원: 주택배정을 임의로 조정한다.

트럭운전수: 수송을 미끼로 한 잡수입이 많다.

도시경영사업소 창고지기: 물자부족 상태에서 물건을 내주면서 뇌물을 받는다.

교육처 직원: 진학 추천대상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다.

교포총국직원: 해외동포 안내 등으로 잡수입이 많다.

체육지도원: 외국에 나갈 일이 많아 외화벌이가 용이하다.

행정부 노동과장: 좋은 직장으로 이동을 원하는 자로부터 뇌물을 받는다.

상업관리소 간부: 국영상점 판매물품을 국정가격으로 취득하거나 물자를 빼돌려 장마당에 공급한다.

생필품 공장 지도원: 공장에서 생필품을 조금이라도 더 챙길 수 있다.

사회안전부 경제감찰과: 이 부서의 주임무는 외화벌이 사업소 및 공장·기업소의 돈을 다루는 부기장이나 도경제담당 간부들의 비리색출이다. 감찰을 빌미로 개인 축재할 기회가 많다.

영농지도원: 영농지도원은 농촌경리위원회 소속으로 협동농장에서 주체농법을 관철시켜야 한다.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 뇌물을 챙길 수 있다.

보위부 출입국 사업부: 해외동포가 북한 친척을 방문할 때 해당 군(郡) 보위부 출입국 사업부에서 확인직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종 뇌물을 챙길 수 있다.

군(郡)내 유통공급소 소장: 유통난 심화로 유통 배분과정에서 각종 뇌물을 수수할 수 있다.

도 농촌경리위원회 토지관리처: 토지 사용 관련 모든 가부 결정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다. 북한내 도단위 행

정 종사자들 사이에 최고 인기 부서이다.

이밖에도 북한의 재외공관원은 외교관 신분을 이용하여 돈벌이에 힘쓰고 있다.⁶⁹⁾

(3) 국경경비대원과 밀거래자들의 결탁

국경경비대의 임무는 국경경비와 밀거래자들의 단속이다. 그러나 이들도 밀거래에 가담하여 생활고를 해결하며, 나아가 제대후 생활기반을 위해 상당한 돈벌이를 하고 있다. 일반사병들은 밀거래자들이 압록강을 도강하거나 강변에서 중국상인들과 접촉할 때 근무시간에 초소를 통과해 주도록 해주고 그에 상응하는 사례비를 받는다. 장교들은 병사들이 밀거래를 묵인해 주고 챙겨오는 뇌물중 일부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국경경비대에서 인민군 복무기간을 마치고 제대할 경우에는 약 10만원 정도의 돈을 챙겨나간다.⁷⁰⁾

나. 일반 노동자

일반 노동자들은 부업과 장사를 통해서 국가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있다. 신의주의 경우 주민의 1/3은 월급에 의한 생활보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다.⁷¹⁾ 여간철에 따르면, 총 노동자의 30% 내외에 달하는 창고장 이상급 수준의 경우, 공식수입 대

69) 고영환, 「평양25시」 (서울: 고려원, 1992) 참조.

70)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44호 (1996.2), p. 14; 154호 (1996.12), p. 18; 122호 (1994.4), p. 19.

71) 오명선(일용품 협동조합 자재인수원), 1996.7.3 면담자료.

부수입의 비율은 1:9 정도이다.⁷²⁾

자강도 중강군 등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의 대부분은 밀거래를 생활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 주부들은 콩나물기르기, 두부만들기, 간단한 옷만들기 등의 부업으로 많게는 월 300~400원의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신의주에서는 90% 이상의 주부가 신발, 양복지, 내의류, 아이옷, 약품 등의 일용품 장사에 종사하고 있다.⁷³⁾

그러나 이러한 약간의 부수입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60~70%는 세끼를 해결하는 데 충분치 못한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끼니를 죽으로 때우고 있다. 당장의 끼니도 해결하기가 어렵게 된 일부 주민들은 혼수품으로 장만해 온 이불·그릇까지도 장마당에 내다팔아 식량을 구입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주민들의 가정에는 간단한 취사도구 이외에는 기타 가정생활용품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⁷⁴⁾

공장가동율이 떨어지면서 노동자들은 본업보다는 농촌지원이나 공장 인근의 건설장, 주요시설, 도로 정비 등 주변 정리로 일과를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희인력 활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농촌지원이다. '92년 11월 경 공장·기업소의 가동율 저하로 유희인력이 많아지자, 노동자 10% 가량을 선발하여 인근 협동농장으로 재배치하여, 2년이상 농장원과 똑같이 농업에 종사토록 하고 있다. 기업소에 남아 있는 인력도 수시로 농촌에 파견, 흙갈이, 모내기, 추수 등 농촌지원에 동원되고 있다.

이밖에도 유희인력은 분노퇴비를 만드는 데 동원되거나, 가마나나 짜리 광주리를 하나씩 만들어 오는 등 다른 일별로 하루 일과를

72) 여만철(노동자), 1996.7.13 면담자료.

73)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44호 (1996.2), p. 13; 137호 (1995.7), p. 13.

74) 여만철(노동자), 1996.7.13 면담자료;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51호 (1996.9), p. 11.

대신하고 있다.⁷⁵⁾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노임이 월 30~50원으로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노임은 생활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노동자는 단순히 식량배급 때문에 공장에 출근하고 있다. 직장에 나와 할 일이 없어 놀다가면, 월급은 나오지 않지만 배급은 주어지기 때문이다.⁷⁶⁾

계획부문 공장 노동자는 뇌물제공 등의 방법을 통하거나 혹은 당국의 의도적인 묵인하에 근무시간을 할애하여 일용품생산 혹은 상거래 행위에 종사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공장의 물건보다는 개인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데 신경을 더 쓰는가 하면, 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빼다가 집에서 조립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간단한 기계를 만들어 팔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안중기계 공장의 노동자들의 평균 노임은 60원이지만, 공장자재로 변압기틀 제작하여 팔면 개당 150원을 받는다.⁷⁷⁾

공장·기업소 노동자들의 가장 큰 희망사항은 개인장사 기회를 마련하여 돈을 버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공장지배인에게 뇌물을 주어 휴가를 얻거나, 또는 자재구입원 직책으로 개인장사 기회를 얻고자 노력한다.⁷⁸⁾ 노동자는 장사하기 위한 시간을 얻기 위해 질병을 핑계로 휴직하는 사례가 많다. 이 때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한데, 의사는 진단서 발급조건으로 뇌물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홍남비료연합기업

75) 서남일, “노임은 받으나 마나 장사해서 먹고산다.” 귀순자 쟁점대담, 6, 『통일한국』 (1996년 7월호), p. 29;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19호 (1994.1), p. 28; 137호 (1995.7), p. 15; 122호 (1994.4), p. 33.

76) 오명선, “형식은 사회주의, 내용은 자본주의와 같다.” p. 93;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42호 (1995.12), p. 9.

77) 박성철(대안중기계 노동자), 1996.7.3 면담자료;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41호 (1995.11), p. 8; 자재빼돌리기는 군수극장에서도 일어난다. 115호 (1993.9), p. 15.

78) 서남일, “계획은 없다. 흥정을 잘해야 공장이 먹고 산다.” p. 29; 오명선(일용품 협동조합 자재인수원), 1996.7.3 면담자료.

소에서는 3일짜리 의사진단서가 소주 한병과 교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진단서 발급과 관련 각종 부정행위가 만연하여 전체 진단서의 60%가 허위진단서이다.⁷⁹⁾

자재구입원은 형식적으로 직장에 적을 두고 있지만, 지배인의 묵인 하에 상당기간 동안 공장에 출근하지 않고 외부에서 전문적으로 장사에 종사하고 있다. 1개 기업소당 자재구입원은 노동자 100명 기준으로 5~6명 정도가 있다. 이들은 서류상으로 직장에 소속되어 매달 노임과 식량을 받아가지만 출근을 하지 않는다. 이들은 그 대가로 1개월 결근은 150~200원, 1년 결근은 휘발유 50킬로그램, 석탄 60톤, 사무용지 1만매, 북한돈 6000원 중 한 가지를 납부하고 있다.⁸⁰⁾ 노동자들 사이에 개인장사 시간을 갖기 위한 알력도 발생하고 있다.

경제난, 간부와 노동자의 규율이완 등에 따라 정규 당-국가 관료 체계를 통해서도 각급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철도 등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97년 4월 경부터 협동농장, 철도, 각 공장·기업소가 군부대에 위탁경영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⁸¹⁾ 인근 지역 중대 이상의 부대가 공장·기업소를 1개씩 맡아 운영에 관계된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다.

협동농장에는 파종기부터 추수기까지 군인들이 상주하고 있다. 중좌나 상좌급 군관은 농장관리위원회에 상주하면서 농장관리에 관여한다. 각 작업반에는 대위급 군관 1명이 배속되어 농장원 개개인의

79) 김창환(홍남비료 연합기업소 전기직장 노동자), 1996.7.4 면담자료; “외화판치는 ‘주체의 나라,’” 「중앙일보」, 1995.1.20;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27호 (1994.9), p. 4; 일부 청년들은 병원측에 뇌물을 제공하고 ‘사회보장자’(신체허약 및 장애로 인한 육체노동 불능자) 판정을 받은후, 암거래·절도·강도행위를 일삼는 폭력조직에 가담하고 있다. 126호 (1994.8), p. 8.

80) 오명선, “형식은 사회주의, 내용은 자본주의와 같다,” pp. 88~92;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36호 (1995.6), p. 18.

81) 「중앙일보」, 1997.8.13;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66호 (1997.12), p. 5~8.

출퇴근 확인, 파종·김매기, 퇴비 등 농장내 모든 작업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간섭하고 관장하고 있다. 철도 등·영도 군대에 위탁되었다. 각 역마다 5~10명의 군인 (소좌나 중좌급 군관 1~2명, 그외 하전사)들이 주둔하면서, 매표, 승하차 질서, 화물 적재 등 철도 업무에 대해 관여하고 있다. 역장의 권한은 무시된다.

다. 군 인

일반 사회에서의 식량난, 생필품난, 부패의 만연은 군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사정 악화로 군인들이 식량·군화·군복 등 군수품을 제대로 보급받지 못하고 있다. 장기간 식량 사정악화로 영양섭취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군인들의 체구가 왜소화되어 있다. 또한 인민군대 하전사 중 영양실조에 걸린 자는 병사 100명당 '94년에는 2~3명, '95년에는 6명, '96년에는 15~20명에 달한다.⁸²⁾

식량을 비롯한 보급 문제때문에 군인들의 대민 범죄가 증대했다. 군인들의 대민 범죄는 주로 민가에서 식량, 건축, 생필품, 가전제품을 약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빠서, 군인은 '마적단·도적단'으로 인식된다. 뿐만 아니라, 군부대 상호간에 군용품을 약탈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이러한 군용품의 일부는 민가에 흘러 들어가기도 한다.⁸³⁾

또한 인민군 내부에서 군수품 갈취, 입당·전급·포상 등에 대한 뇌물 요구, 금품 상납강요 등의 각종 비리가 성행하고 있다. 북한군 각

82) 최승학(김화군 식료수배사업소 수매원), 95.12.5 면담자료;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19호 (1994.1), p. 26; 121호 (1994.3), p. 24; 133호 (1995.3), pp. 16~18; 145호 (1996.3), p. 18.

83) 김형덕(속도전 청년돌격대 부소대장), 95.12.14 면담자료;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14호 (1993.8), p. 27; 108호 (1993.2), pp. 22~24.

부대내 창고장 등 군보급품 담당자는 보급품이 내려오면 소대장이나 중대장의 가정에 일정량을 떼어다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으며, 장교들도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사병들의 보급품 중 일부를 자진상납토록 유도하고 있다.⁸⁴⁾

이러한 상황은 군대내 기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표적 유형은 다음과 같다.⁸⁵⁾ ㉠ 상급자들은 걸핏하면 하급자들을 구타하고 하급자들은 이에 대해 반항하기 일쑤이다. ㉡ 사병들은 잠복근무시 초소에 있지도 않고 적당한 곳에 누워서 쉬거나 소대창고에서 미리 훔친 쌀을 들고 나가 민가에서 술로 바꿨다 마신다. ㉢ 훈련이나 교육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만 몰두한다. 식량부족, 상급자의 구타와 힘든 훈련으로 인한 탈영자도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93년에 들어서는 군내의 탈영자 수가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에 달하기도 하였다.⁸⁶⁾

라. 청소년

식량난 등 경제난은 학교교육과 청소년 문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식량부족 심화에 따라 공장·기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탁아소가 폐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식량배급을 제대로

84) 박철호(국경경비총국 분대장), 1997.4.24 면담자료; 최주환(인민군 후방총국 상좌), "군간부 승진의 기준은 충성심," 귀순자 쟁점대담 14, 『통일한국』 (1997년 1월호), p. 55; 최주환, "군부엘리트의 정치학습: 경제 어려워지면서 군사기강 문란해졌다," 귀순자 쟁점대담 13, 『통일한국』 (1997년 2월호), pp. 70~71;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38호 (1995.8), p. 21; 110호 (1993.4), pp. 19~20; 139호 (1995.9), p. 17.

85)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39호 (1995.9), pp. 10~16.

86) 위의 책, p. 11;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16호 (1993.10), p. 10.

못받게 되자 탁아소 측에서 아이들을 맡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⁸⁷⁾ 이러한 이유로 군(郡)탁아소만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 군 탁아소는 간부자식들을 중심으로 정원의 30%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

식량난 때문에 학교별로 학생들의 60% 정도가 결석하고 있다. 학생들은 주로 인근 야산에 칩뿌리나 풀뿌리, 산나물을 캐러 가거나 식량을 운반하는 리어카 강탈 방지를 위해서 부모를 따라 나서고 있다. 교원들도 학교장의 묵인하에 조를 나누어 순번제로 식량을 구하러 다니고 있다. 또한 북한 학생들은 매월, 계절, 계기별로 각종 물품을 수집하여 학교에 납부해야 한다.⁸⁸⁾ 주요 물품을 보면, 외화별이용으로 토끼가죽, 동, 아연, 알루미늄, 재활용품으로 파철, 파지, 파고무, 고포(얇은 옷, 천조각), 약재로서 살구씨, 복숭아씨, 피마자, 환경미화용으로 페인트, 락카, 신나, 도료, 유류, 나무, 끈 등이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이다. 부모들은 직장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훔친 물품을 물물교환하여 할당량을 맞추고 있다.

북한의 고등중학교 1학년 이상은 모두 농사에 동원되고 있다. 유류난으로 각종 공장의 가동을 중지하거나 차량운행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농사에서조차 농기계 작동을 못하자, 대신 학생·노동자들을 농사에 대거 동원하고 있다.⁸⁹⁾ 고등중학교 학생들은 저학년 시절에는 비교적 공부에 관심이 있으나 고학년이 될수록 대학진학의 불가능 등 여러 사유로 인해 공부보다는 노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고학년들은 방과후에 주로 몰려다니며 주재놀이, 패싸움, 유희비

87)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53호 (1996.11), p. 24.

88) 김영국(철산 자동차학교 학생), 1996.6.26 면담자료;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49호 (1996.7), p. 31; 139호 (1996.9), p. 11.

89) “국교생 방과후 벌레잡기전투 동원,” 「중앙일보」, 1995.4.11;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43호 (1996.1), p. 13.

마련을 위해 장마당에서 절도 또는 장사에 종사하고 있다.⁹⁰⁾ 대학생 들중 5% 정도는 장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방학을 이용하여 지방에서 골동품을 구입하여 평양에 팔거나 국경지역에서 중국 물품을 구입하여 내륙지역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기고 있다.⁹¹⁾

3. 정치·사회적 통제력의 약화와 중앙정부의 대응

국가의 식량·소비재 공급능력 마비와 암시장 인플레이는 모든 주민의 생활영위방식을 위협했다. 이 때문에 중간간부의 부패, 노동자들의 직장 이탈과 국가물건 절취가 증대했으며, 국가 기본 행정체계의 기능이 저하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반에서 정치·사회적 기강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 당국은 '90년대에 들어서 심화되고 있는 경제난에 따른 정치·사회적 기강이완과 통제력의 약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안부문을 중심으로 여러 조치를 취해 왔다. 정치적 범죄, 일반형사범과 같은 전통적 유형 이외에, 특히 경제관련 사범에 대한 경고, 단속, 처벌 등이 한층 강화되었다. 북한은 포고문, 특별지시문, 공개처형, 집단수용소에의 강제수용 등을 통하여 '비사회주의의 범죄'에 대처해 왔다. 그와 함께 북한은 기존의 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 등의 정규 공안조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러 형태의 비정규 공안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해 왔다.

90) 김영국, "학교다닐 때부터 장사했다," 귀순자 쟁점대담 10, 「통일한국」(1996년 11월호), pp. 84~88;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47호 (1996.5), p. 19; 140호 (1995.10), pp. 14~15; 126호 (1994.8), p. 9; 청소년층 사회일탈 현상 급증에 관해서는 126호 (1994.8), p. 20 참조.

91) 윤웅(노동자 출신 대학생), 1996.7.8 면담자료.

가. 정치적 기강의 이완

(1) 김일성·김정일의 절대성에 대한 회의 증대

최근 북한사회에서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김일성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인식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 정권이 들어서면서 식량난 등 경제난이 더욱 심각해지자 당·정·군 간부는 물론 일반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일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은, '김정일 때문에 인민경제가 파탄났다'고 인식하고 있다. 절친한 사람들과의 대화시 김일성 부자를 비판하는 사례가 점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김일성 사후 우상화 상징물 훼손 사건도 발생했다. 북한당국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각종 지시를 하달한 후 이에 대한 부작용이나 주민불만이 극심해지면 강에서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주민들은 '당이 인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⁹²⁾

(2) 젊은 층의 사고 변화

과거 북한에서 노동당 입당은 곧 출세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젊은 층은 입당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입당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군입대를 선호했다. 그러나 '90년대 젊은 층 사이에서는 당성보다는 돈이 최고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 당원보다는 돈 잘버는 직업, 성분 토대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에 따

92) 정재광(사회안전부 치과기공사), 1997.4.17 면담 자료; 북한문제연구소, 「최근 북한실상」, 150호 (1996.8), pp. 1~4; 144호 (1993.2), p. 7; 125호 (1994.7), p. 1; 134호 (1995.4), pp. 1~2;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서재진,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참조.

라 군입대 기피도 증가하여,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대학 진학을 선호하거나, 또는 군입대보다는 장사를 해서 개인재산을 축적하려는 경향도 나타난다.⁹³⁾ 이러한 풍조는 간부층에도 나타나고 있다. 김일성과 함께 항일투쟁을 한 이른바 혁명 1세대를 포함한 고위 간부층 자녀 대부분은 그간 당연시 여기던 국가기관 근무를 통한 대를 이은 충성보다는 외화벌이 사업체에 종사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젊은 층은 당에 입당하는 것보다는 외화나 물건에 접근할 수 있는 외교관, 무역일꾼, 창고장, 물자관리원, 운전기사가 되려고 애쓰고 있다.⁹⁴⁾

(3)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 증대

최근 일부주민들은 귀국한 재러시아 벌목공 등 해외여행 경험자들로부터 외국생활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서 북한 체제의 모순을 자각할 뿐만 아니라 체제비판 발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⁹⁵⁾ 또한 최근 북한 대학교수들 중에는 강의시간을 이용하여 북한 사회의 모순점 및 체제의 한계성 등을 지적하는 등 체제 비판적 발언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해외생활 경험자, 대학생 등 젊은 층에서는 가까운 친구 및 친지들에게 김일성 부자 비난 등 반체제 활동을 하다가 보위부원들

93) 정성산(북한군 기동예술대 연출가), “군 선전사업 목적은 병사들의 사기진작,” 귀순자 쟁점대담 14, 『통일한국』 (1997년 5월호), p. 69; 김종현(속도전 청년돌격대 자재참모), “북한 속도전 청년돌격대,” 귀순자 쟁점대담 20, 『통일한국』 (1997년 11월호), p. 69.

94) “외화판치는 ‘주체의 나라,’” 『중앙일보』, 1995.1.20; “젊은이 사고 변하고 있다,” 『중앙일보』, 1995.2.9;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42호 (1995.12), p. 3.

95)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46호 (1996.4), p. 7; 145호 (1996.3), p. 1; 148호 (1996.6), pp. 5~6; 유학생 사상이완 문제에 대해서 118호 (1993.12), pp. 24~29.

에게 적발되어 '통제구역'으로 추방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 난망으로 패배주의 의식이 만연되어 체제불신 현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4) 체제 저항적 행위의 출현

북한 주민들 간에는 체제비판적이거나 개인비리를 고발하는 낙서가 증대하고 있다. 주민들의 낙서 가운데는 부패한 생활을 일삼는 간부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가장 많다. 북한당국은 주민들 간에 증가하고 있는 개인비난 등 각종 낙서를 정치적 사건으로 분류하여 보위부에서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뼈라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⁹⁶⁾

낙서사건 이외에도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 단체제 조직결성 시도도 존재했다. '93년초 김일성종합대학의 해외유학 복귀생들이 주축이 되어 김책공업대학, 평성이과대학, 평양의학대학 학생들까지 망라한 대규모 반체제 결사조직(구성원 100여명)이 구성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생이나 김책공대생 및 함경도 출신자들이 반정부 음모활동을 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부류라고 판단하고 각 대학마다 정보원을 대폭 증원하는 등 이들에 대한 동향 감시를 더욱 강화했다.⁹⁷⁾

96) 최주환(인민군 후방총국 상좌), 1996.5.20 면담자료; 김광일(농촌경리위원회 지도원), 1996.7.9 면담자료;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153호 (1996.11), p. 11.

97)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120호 (1994.2), pp. 7~8; 122호 (1994.4), p. 8.

(5) 조직생활의 이완

주민은 소속단체별로 생활총화, 정치학습, 기술학습 등 '조직생활'에 끊임없이 참가해야 한다. 김정일이 등장한 '70년대 중반이후 이러한 조직생활에서 빠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90년대 들어 이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생활총화에서의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이 요식적 행사로 변하고 있으며, 불법적 활동에 대한 주민의 고발, 신고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정치학습은 유치원때부터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나 공장에서도 환영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빠지되, 빠질 수 없으면 주로 잠자는 시간으로 이용되고 있다.⁹⁸⁾ 이미 '87~8년경부터 인민무력부내 학습에서도 형식주의, 요령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했으며, 각종 강연회 소집시 일반주민들은 물론 당원들까지도 가족이 위독하다는 등 구실을 대고 불참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갈수록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그 동안 북한당국이 강조해 오던 사상우선주의에 대해 점점 회의감을 느끼고 있으며 사상통치로는 더 이상 주민생활 문제를 해결하기가 요원하다고 생각하고 있다.⁹⁹⁾

(6) 지역적 정치분위기의 차이

지역별로 주민의 북한체제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함경북도, 양강도, 평안북도 지역 주민들은 반체제 성향이 강해 체제비

98) 김영국, "학교다닐 때부터 장사했다," p. 85; 서남일, "노임은 받으나 마나 장사해서 먹고산다," p. 28.

99) 최주환(인민군 상좌), 1996.5.20 면담자료; "풀어지는 감시체제," 『중앙일보』 95.2.7;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24호 (1994.6), pp. 1~2; 142호 (1995.12), p. 3.

판적 발언도 수시로 하는 편이다. 특히 함경북도가 두드러진다. 함경북도 지역은 국경무역 등으로 인한 외부사조 유입이 많아지면서 북한내에서 반체제 성향이 가장 농후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평양, 황해도 등의 지역에서는 반체제 발언을 하면 즉각 신고되어 처벌을 당하므로 신중을 기하는 편이다. 함경남도 지역은 중간 정도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¹⁰⁰⁾

나. 사회적 기강의 이완

(1) 절도 등 경범자의 증대

북한에서는 사회전반에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물품절취가 일반화되어 있다. 절도 사건의 가장 보편적인 사례는 자신의 직장에서 물건을 빼돌리는 일이다. 이에겐 간부, 노동자 모두가 참가하고 있다. 협동농장의 경우 관리위원회에서 농민에 이르기 까지 식량을 절취하기 때문에 북한당국은 생산된 식량의 60~70% 밖에 장악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개인물건을 훔쳐야 도둑이지 국가물건을 훔치는 것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¹⁰¹⁾

북한에서는 극심한 생활난에 따라 이웃간에도 개인물건에 대한 크고 작은 절도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주민간에는 빈집을 털거나 식량도 약속 기한내에 갖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도

100) 박철만(잡업 검역소 지도원), 95.12.7 면담자료; 이정국도 함경북도에서 반김정일 사건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본다. 이정국(인민무력부 산하 외화벌이꾼), 1997.5.22 면담자료;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50호 (1996.8), pp. 4~5.

101) “늘어나는 강·절도범,” 「중앙일보」, 1995.2.21;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49호 (1996.7), pp. 5~6.

식량·생필품할 것 없이 눈에 띄기만 하면 훔쳐오는 버릇도 늘어나고 있다. 자전거, 신발, 속옷 등의 줌도둑도 성행하고 있다. 절도범 뿐만 아니라 소매치기, 깡패 등의 범죄 현상도 증대하고 있다. 방북 외국인을 상대로 한 소매치기범도 대폭 늘고 있다.¹⁰²⁾ 여성 강절도범들은 남자와 조를 이루거나 여성들끼리 꽤거리를 만들어 활동한다. 실업자들이 떼를 지어다니면서 패싸움을 벌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 도로 무단횡단과 버스매달리기 등 사회기강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90년대 초부터 경범죄자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함흥은 강도, 소매치기, 깡패 등이 많다. 이곳이 이처럼 범죄가 많은 이유는 인구밀도에 비해 농경지가 부족하여 식량사정이 최악의 상태인데다, 재일동포, 화교 등이 많이 살고 있어 이들과 주민들과의 빈부격차가 심하며, 대부분의 열차들이 통과하는 교통중심지로 외지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기 때문이다. '92년에는 '함흥 출신은 군관으로 선발하지 말라'는 지시도 내려졌다.¹⁰³⁾

(2) 가족 해체와 사회적 한계계층의 증대

식량난이 극심해지면서 어른들은 영양실조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어린이들도 제대로 먹지 못해 각 군인민병원에서 하루 7~8명씩 영양실조로 사망하고 있다. 식량난으로 부부간의 이혼 및 가출로 가정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생활고 심화로 가정 주부

102) "늘어나는 강절도범," 「중앙일보」, 1995.2.21;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51호 (1996.9), pp. 15, 47; 136호 (1995.6), pp. 24~27; 119호 (1994.1), p. 31; 103호 (1992.9), pp. 17~18.

103) 이충국(인테리), 1997.7.13 면담자료;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36호 (1995.6), pp. 24~27.

들이 장사에 나서면서 어린이를 방치해 두는 일이 많아지자 행방불명되는 어린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식량난 등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부모들이 아이들을 내다 버리거나 아이들을 남겨두고 중국 등지로 탈출하는 일이 빈번하여 고아 숫자가 현저히 증가했다. 이와 같은 사정때문에 거지 및 부랑자들이 급증했다. '90년도 각 지방 역전에는 부랑자가 3~4명 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94년경에는 7~8명으로 증가하였다. 부랑자의 대부분은 노인, 어린이, 중년 여인이다.¹⁰⁴⁾

(3) 매춘의 증대

식량난 심화로 '95년경부터 18~20세 되는 처녀들이 50~100원에 몸을 파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매춘은 주로 대도시의 역전, 장마당, 외화상점과 호텔 주변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매춘과 함께 포르노 테이프도 유통되어 흘러다니고 있다. 또한 국경지역인 회령, 신의주, 용기, 만포, 혜산 등지에 거주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방북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매춘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방북자 중에는 생활고에 처한 여성들을 피어 중국 등지로 팔아넘기는 등 인신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다.¹⁰⁵⁾

104) 내외통신사, 「북한실상종합자료집」, pp. 178~179;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23호 (1994.5), p. 10; 111호 (1993.5) p. 14; 153호 (1996.11), p. 12; 115호 (1993.9), p. 28.

105) “성개방 확산 매춘도 등장,” 「중앙일보」, 1995.2.12; 내외통신사, 「북한실상종합자료집」, p. 174;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09호 (1993.3), pp. 28~30; 119호 (1994.1), p. 34; 120호 (1994.2), pp. 28~30; 118호 (1993.12), p. 32.

(4) 계층간 위화감의 발생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빈부차이의 발생으로 인해 새로운 계층적 위화감이 발생하고 있다. 위화감은 두가지 이유에서 발생한다.¹⁰⁶⁾ 첫째, 암거래 성행의 결과로 신흥 부유층이 등장함에 따른 위화감이 다. 이러한 신흥 '갑작부자'는 중국과의 중개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화교, 그리고 외화벌이에 종사하는 무역일꾼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국경무역 암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함북 회령, 무산, 온성과 평북 신의주 등 국경지역 주요 도시에서 '갑작부자'층이 다수 등장했다. 이에 따라 주민간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갈등이 노정되고 있다.

둘째, 해외친척의 혜택을 보는 층에 대하여 그렇지 못한 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다. 북한주민들 중 해외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해외친척들이 재북가족들에게 송금을 해주거나 방북하면서 물건을 갖다 주어 벼락부자가 되는 사례가 있는 등 생활형편이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일반주민들 중에 '왜 우리 친척은 해외에 한명도 없는가'라고 원망과 부러움이 섞인 신세한탄 풍조가 발생하고 있다.

(5) 여행의 증가

식량과 장사를 위하여 주민들의 이동이 전에 없이 증대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통행증없는 주민들의 여행을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¹⁰⁷⁾ 함경남도 함흥 지역은 '90년 4월부터 식량구입을 위한 여행

106) 정기해(인민무력부 보위대학 수산은천기지 운전수) 면담자료, 1995.4.17; "자가용족 등장," 「중앙일보」, 1995.1.26;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40호 (1995.10), p. 1.

107) 김대호(남천화학 연합기업소 부직장장), 1996.7.9 면담자료.

을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⁰⁸⁾ 여행 목적에 따른 비율을 보면, 식량 구입이 70%, 장사 15%, 출장 15% 정도이다.¹⁰⁹⁾ 주민들의 이동때문에, 직장, 학교 등의 공공기관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여행도중에 많은 외지 사람들, 그리고 유언비어성 소문과 접촉하는 현상도 나타나므로써 정보통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여행자 증대에 따라 관련 범죄와 부패도 늘어나고 있다.¹¹⁰⁾ 최근 주민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식량과 교환할 물건을 들고 정해진 목적지 없이 아무 곳이나 가는 것을 두고 '행방 떠났다'(행방불명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¹¹¹⁾

이러한 여행의 대표적 경로는 함경도와 황해도간 여행이다. 함경도 주민들은 부족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계 및 직장에서 빼돌린 공산품이나 인근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가지고 평야지대인 황해도 등에 가서 쌀과 교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함경도 지방에서 황해도 방향으로 가는 열차칸에는 중국산 술, 담배 및 공산품과 수산물 보따리가 선반은 물론 통로까지 가득차 있어 비리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한다. 반대로 황해도에서 함경도 방향으로 가는 열차칸은 공산품 등과 바꾼 강냉이, 쌀 등의 식량배낭들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여서 객차내는 사람 반 짐 반의 상태이다.¹¹²⁾

108) 여만철(노동자), 1996.7.13 면담자료.

109) 신명철(청단 체신소 선로공), 1996.7.4 면담자료.

110) "일반 열차," 「중앙일보」, 1995.3.9.

111) 최동철(4·25 담배농장 농장원), 1996.7.1 면담자료; 북한문제연구소, 「최근 북한실상」 146호 (1996.4), p. 13.

112) "식량부족으로 풀린 여행제한," 「중앙일보」, 1995.1.21;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46호 (1996.4), pp. 14~15; 117호 (1993.11), pp. 19~20.

(6) 미신의 증대

최근 북한에서는 경제난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고 미래도 불투명해지자 자연발생적으로 미신신봉자들이 늘고 있다. 점장이와 관상쟁이가 가장 흔하며, 복채만 마련되면 점장이를 찾아갈 정도로 미신이 만연하고 있다. 용하다는 점쟁이는 당간부, 안전원들도 찾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¹¹³⁾

다. 중앙정부의 대응

(1) 포고문, 공개처형 등의 통치형태

북한은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주민들의 일탈행위가 증가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포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 사후 거의 매월 1건씩 포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포고문은 각 기관·기업소, 상점, 큰길, 역대합실 등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에 부착된다. 또는 인민반별로 간부들이 포고문을 직접 전달한다.¹¹⁴⁾ 포고문의 내용은 각 포고문 별로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서술하고 위반시 처벌조항까지 기재한다. 이제까지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하천의 제방시설 훼손 금지 사항 (가축 사육 금지), ② 전기낭비 (전열기 사용, 지정전등 이외 전기사용, 교차생산 위반), ③ 농작물 손상행위, ④ 철도이용 관련사항 (무임승차, 철도무단횡단, 철도구조물 손상 등).

113) “사회풍속도,” 『중앙일보』, 1995.3.23;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51호 (1996.9), p. 18.

114) 최동철(4·25 담배농장 농장원), 1996.7.1 면담자료;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65호 (1997.11), p. 10.

북한은 또한 명절 때마다 각 기관·기업소 단위로 당중앙위 명의의 특별경비 지시문을 하달하여 주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¹¹⁵⁾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명절기간 중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우 단위 책임자에게 반드시 신고하라, ② 술먹고 ㄱ대부리지 말라, ③ 여럿이 모여 술을 먹지 말라, ④ 절도, 강도 등 각종 사건·사고를 야기하지 말라, ⑤ 수상한 인물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보고하라 등이다.

북한은 '비사회주의 현상'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92년부터 시·군 단위 별로 '현지 공개재판'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민의 왕래가 빈번한 시내 중심가의 화물차 위에 약식 재판정을 만들어 놓고, 안전부장이나 분주소장이 단독으로 약식 판결을 내린다.¹¹⁶⁾ 이외에도 식량난에 따른 주민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공개처형도 실시하고 있다.¹¹⁷⁾ 교화소와 수용소에서는 재판없이 피의자에 대한 비공개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재산에 손실을 입히거나 공금 횡령·불법상행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 특히 외화를 3령한 자들은 집단수용소에 강제수용되어 정치범 이상의 엄격한 제지조치를 받고 있다.

(2) 공안조직의 강화

이와 함께 북한은 기존의 공안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여러 형태의 비정규 공안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그 실태를 보면 다음

115)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65호 (1997.11), p. 11.

116) 내외통신사, 「북한실상종합자료집」, pp. 148~149;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02호 (1991.8), p. 14; 90호 (1991.8), p. 14; 121호 (1994.3), p. 11.

117)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23명의 공개처형자 명단을 밝히고 있다.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North Korea), Public Executions: Converging Testimonies," AI INDEX: ASA 24/01/97 (January 1997); 일본의 교도통신과 도쿄신문은 인민군 총정치국부국장 이봉원은 1997년 7월, 농업담당비서 서관희는 9월경 다른 수명의 간부와 함께 평양교외에서 공개처형되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1997.11.6; 11.7.

과 같다.

(가) 인민반 조직 확대 개편

인민반은 동·리·읍·노동자구 인민위원회 통제하에 반원의 생활지도, 각종 수집작업과 사상동향 파악 및 반내 외부방문자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최말단 조직이다. 북한은 '94년초 인민반 조직을 기존 20~30세대에서 30~40세대로 확대 개편하였다. 최근 인민반의 주된 임무는 급증하고 있는 절도·밀주제조·폭력행위 등 이른바 비사회주의 현상의 척결이다.¹¹⁸⁾

북한은 김일성 사망 직후 인민반장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주민들은 개인이나 가족단위 이동이 있을 때 반드시 인민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친척집을 방문했을 시에도 과거 분주소에 먼저 신고하던 것과 달리 인민반장에게 먼저 신고해야 한다. 인민반장은 5일에 한번씩 안전원과 보위부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평양 등 일부지역에서만 유급화했던 인민반장의 노임도 농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유급화하고, 그 액수도 인상하여 월 68원(과거 60원)을 주고 있다.¹¹⁹⁾

(나) 기존 공안기관의 개편과 강화

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 조선인민군보위부 등 기존 공안조직의 기구가 확대·강화되었으며, 산하에 특별 조직이 신설 운영되고 있다.

118) “고달픈 인민반,” 『중앙일보』, 1995.2.28; 내외통신사, 『북한실상종합자료집』, pp. 131~132.

119) 이순옥(농장원), 1996.7.12 면담자료;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36호 (1995.6), p. 3.

<국가안전보위부>

㉠ 조직의 확대 개편

'93년 4월 9일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를 계기로 국가보위부 조직을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명칭도 국가안전보위부로 개칭하여 김정일이 관장하는 국방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했다. 이로써 국가안전보위부는 일반사법기관들이인 사회안전부, 검찰소, 기판소 등은 물론 당·정기관보다 초법적인 권력을 갖고 오직 김정일 지시에 따른 상급 보위부(군보위부 → 시보위부 → 국가보위부) 지휘에만 복종하는 종적 관계를 형성하여 최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¹²⁰⁾

㉡ 보위부원의 권한 강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²¹⁾ ① 북한은 최말단 보위부원이라도 당기관 간부들까지 상대할 수 있도록 업무상 권한을 100퍼센트 보장하고 있다. ② 보위부 지도원 1인당 지급되는 공작비를 하루 5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고, ③ 사업 수행에 정보원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정보원을 해당 직장에서 차출할 수 있도록 하며, ④ 정보원들이 제출하는 '자료'도 월 5건에서 15건으로 건수를 상향 조정하고, ⑤ 신속보고를 위해 담당 보위부원과 정보원간 관계를 돈독히 하도록 했다.

㉢ 보위부원에 대한 대우 강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²²⁾ ① 군(郡) 보위부장 차량은 짚차에서 일제 닛산 승용차로 모두 교체하며, ② 식량배급시에도 전보위부원에게 100퍼센트 배급을 보장한다. 쌀이 없을 경우는 후방차로 직접

120) 내외통신사, 「북한실상종합자료집」, p. 134.

121)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53호 (1996.11), p. 21.

122) 위의 책, pp. 21~22.

남포·신의주 등에서 수입쌀을 실어다 취식하도록 한다.

㊸ 특명그루빠

'93년 초 김정일은 중앙당·정무원·인민무력부 등의 하위직 간부들은 물론, 고위 간부층에서도 사상동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을 감시 및 조사하기 위해 국가보위부 내에 특명그루빠를 조직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중앙당 부장급 이상의 고위간부들을 담당한다.¹²³⁾

<조선인민군 보위부>

군대내의 국가안전보위부 격인 보위부도 수사과 인원을 배로 늘리고, 도청을 담당하는 탐색과를 신설했으며, 과거 군 보위부를 통제했던 정치일꾼에 대해서도 내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외에도 전연지대(휴전선지대)에는 소대단위, 후방에는 연대단위에 보위군관을 한 명씩 상주시키고 소대별로 수명씩 스파이를 심어두면서 모든 병사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¹²⁴⁾

<사회안전부>

기존 조직의 활동이 강화되고 새로운 조직과 활동이 개설되었다.

㉠ 경제감찰과

일반범법자는 감찰과에서 다루어지며, 경제범죄자들은 경제감찰과에서 다루어진다. 경제감찰과는 외화벌이 사업소 및 공장·기업소의

123)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10호 (1993.4), p. 17.

124) 최주환, “북한 인민군 보위사령부의 체계 및 활동,” 「북한조사연구」, 제1권 1호 (1997), pp. 45~62; 내외통신사, 「북한실상종합자료집」, pp. 134~135.

돈을 다루는 부기장이나 도 경제담당 간부들의 비리를 색출하고 있다.¹²⁵⁾

㉠ 노동자 규찰대와 주민순찰대

'92년부터 분주소 별로 공장·기업소 노동자중 특수부대 출신 청년 10여명으로 구성된 노동자 규찰대를 조직하여 범죄 빈발 지역의 검문검색 활동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들이 범죄단속을 축재기회로 활용했다. 이들은 '93년말 '94년 초에 걸쳐서 해산되었다.

노동규찰대 해산이후 분주소별로 주민규찰대가 신설되었다. 이들은 공장·기업소 제대군인 중에서 체력이 뛰어난 자를 선발하여 구성하나, 성분이 좋은 자로 엄선하고 단속대상도 주로 절도범죄에 한정함으로써 비리 소지를 줄이고자 했다.¹²⁶⁾

㉡ 경범죄 처벌 기관의 강화

강제노동대에는 교화소에 수용하기에는 범죄가 미미한 각종 규정 위반 경범죄자들이 수용된다. 이는 과거에는 광산에만 존재했으나, '92년부터 각 군(郡)마다 설치하여 경범죄자 40~60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다. 강제노동대는 사회안전부 소속으로 '육체적 부담을 가하여 교화시킨다'는 방침에 의거하여 운영된다. 광산이나 농촌 등 일손이 필요한 지역마다 돌아가며 무보수 강제노동을 해야 한다.¹²⁷⁾

125)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41호 (1995.11), p. 4.

126) 내외통신사, 「북한실상종합자료집」, pp. 136~137;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16호 (1993.10), p. 14.

127) 내외통신사, 「북한실상종합자료집」, p. 155;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19호 (1994.1), p. 16; 강제노동대의 각종 비인권적 행위에 대해서 153호 (1996.11), pp. 14~18; 유사한 기관으로 강제노동 집결소라는 것이 있다. 안전부가 수사없이 무단 결근자 등 각종 규정 위반자를 강제노동집결소에 수용하여 15일에서 6개월까지 무보수 강제노동에 종사시킨다. 130호 (1994.12), p. 5.

노동교양소에는 비상습 단순 절도범, 1000원 미만의 경제사범 등 경범죄자가 담당 지역 안전부장의 결정과 해당 안전부 관할 검찰소의 확인만으로 수감된다. 수용자들은 정식 재판절차를 거쳐 수감되는 범죄자가 아니다. 따라서 비록 개인 문건에 수용사실이 기록되지만, 출소 이전의 직책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수용자들은 농장·과수원·탄광·목장 등을 운영하면서 중노동을 해야 한다. 수용기간은 2년이다.¹²⁸⁾

<3대혁명소조 직보체계 수립>

김정일은 '89년부터 시·도·군 소조사업부에 대해서는 행정지원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보고는 중앙에서 별도로 파견한 3대혁명소조원 조직인 시·도·군 소조종합을 통하도록 했다. 김정일은 '91년부터 군단위 소조원 활동을 군 소조종합에서 취합하여 시·도 소조종합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김정일)에 보고하도록 하였다.¹²⁹⁾

<통보지도원>

김정일이 공안요원의 보고를 믿지 못하겠다고 지적함에 따라 중앙당 조직지도부가 '89년 통보지도원을 신설했다. 조직지도부는 군단위마다 3대혁명소조원 출신자 중 열성분자를 선발하여 당책임비서나 공안원들도 모르게 비밀리에 당간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일반주민의 언동을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했다.¹³⁰⁾

128) 내외통신사, 「북한실상종합자료집」, p. 163;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30호 (1994.12), pp. 3~11.

129) 내외통신사, 「북한실상종합자료집」, pp. 163~164.

130)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06호 (1992.12), p. 19; 북한에서는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등 각 사찰기관에서 정보원을 운용하는 관계로 성인 3명중 1명이 정보원이라 한다. 115호 (1993.9), p. 11.

<불량청소년 과외교양 지도사업부>

사로청 산하기관인 이 조직은 '94년 중반에 신설되었고, 도·시·군 단위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 임무는, 강도·절도·강간 등 범법행위자, 직장 및 학교 결석이 잦은 자, 자본주의 풍습을 유포하거나 모방하는 자 등 불량청소년을 교양 선도하는 것이다.¹³¹⁾

③ 통합 공안 조직의 신설

북한은 각 공안조직 체계의 강화를 시도함과 아울러, 여러 공안조직 또는 유관 감독 조직을 엮어서 통합 공안조직을 신설 운영했다.

<유동그루빠>

북한은 '90년대 중반 전국 구역안전부 단위까지 안전원(대위급)과 안전부 정치대학 졸업예정자(소위) 2명을 1개조로 구성한 유동그루빠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외화벌이 사업체의 불법상행위 등 급증하고 있는 경제사범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¹³²⁾

<6·4 그루빠>

북한은 '91년 6월 4일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시·군 단위별로 안전원과 보위부원으로 구성된 6·4그루빠를 편성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절도, 근무태만, 무단결근 등 사회범죄와 사회기강 부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담당하고 있다.¹³³⁾

131) 내외통신사, 「북한실상종합자료집」, p. 138.

132)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31호 (1995.1), p. 4.

133) “외화관치는 ‘주체의 나라,’” 「중앙일보」, 1995.1.20;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31호 (1995.1), p. 5.

<비사회주의의 타파 그루빠>

이 조직은 '92년 10월 1일 김정일의 지시로 조직되어 '93년 하반기에 그 활동이 종료되었다. 이 조직은 각 시도 지역별로 검찰·사회안전부·당위원회·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직업총동맹 등 5개기관에서 각각 동수로 차출된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조직원들은 그 지역의 주요 공장·기업소·협동농장에 파견되었다.

북한이 기존의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3대혁명소조 등 주민 감시통제 조직을 두고서 별도로 비사회주의의 타파 그루빠를 조직한 이유는 기관본위주의를 근절하기 위해서였다. 공장·기업소·협동농장 등 생산기관에는 기존 공안기관요원들이 상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해당 노동자들과 협력하여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고의적으로 불량품 처리하여 생산품을 빼내 착복하고 있었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물품을 빼낸 타기관 사람들과 물물교환을 하기도 했다.¹³⁴⁾ 그루빠는, 주야간은 물론 사무실·작업장 등 근무현장은 물론 가정에까지 불시에 들이닥쳐 생산제품의 절취여부, 중국·미주 등 해외로부터의 물품 반입여부, 한국산 물품 사용 여부 등을 파악했다. '94년초에는 김정일의 지시로 국경지역의 밀거래를 전담하는 '비사회주의의 그루빠'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¹³⁵⁾

(3) 공안 조직의 폐단

정규·비정규 보안조직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앙의 의지대

134) 김대호(남포지구 수산 외화벌이 원천채취대대장), 95.4.14 면담자료

135) 내외통신사, 「북한실상종합자료집」, pp. 135~136; 비사회주의의 타파사업 마감 총화에 대해서는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25호 (1994.7), pp. 29~31; 144호 (1996.2), pp. 15~16 참조.

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 암시장에서의 가격폭등, 만연하는 부패상황에 보안요원들도 적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간기능을 담당하는 요원들도 자신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부패와 오직을 저지르고 있다. 보위부원, 안전원, 그리고 기타 비정규 사찰조직의 활동은 여러 폐해를 낳고 있다. 그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¹³⁶⁾

- ① 이들은 온갖 비리를 저지른 간부층은 연줄관계 등 때문에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 할 수 없이 법규를 어긴 일반 노동자 계층을 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¹³⁷⁾
- ② 이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무고한 사람에 대하여 죄를 만들어 검거하는 경우가 많다.
- ③ 직권을 남용하여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보위부원은 상업관리소 급양부문 담당자에게 직권을 이용하여 필요한 물품을 요구한다. 또한 이들은 사소한 트집 또는 약점을 잡아 뇌물을 챙긴다. 농민시장 등에서는 단속을 핑계로 물건을 집어가는 횡포를 부린다.
- ④ 안전부·보위부 등은 폭력조직과 연계하여 공생관계를 유지한다. 폭력조직은 안전원에게 상납을 하면서 검거시 신변안전을 보장받으며, 보위부원이 암거래상으로부터 압수한 물건도 처분해준다.¹³⁸⁾
- ⑤ 사회기강확립을 위해 열차, 역전, 거리 등에 증가배치된 안전원

136) 오명선, “형식은 사회주의, 내용은 자본주의와 같다,” p. 92;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53호 (1996.11), pp. 21~23, 141호 (1995.11), p. 4; 119호 (1994.1), p. 19; 125호 (1994.7), pp. 29~30; 126호 (1994.8), pp. 11~12.

137) 최주환은 1995년 초 인민군 검찰조사가 뇌물 등 범법자를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증언한다. 최주환, 1996.5.20 면담자료.

138) 김대호(남천화학연합기업소 부직장장), 1996.7.9 면담자료.

은 거칠고 과잉스런 단속으로 주민의 반감을 유발한다.¹³⁹⁾ 또한 수사 및 수감 과정에서 구타 및 고문으로 사상사건이 빈발한다. 이밖에도 노동대, 교양소, 교화소, 관리소에서도 사상사건이 빈발한다.

- ⑥ 한편에서는 안전원과 보위부원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증대하여 '전쟁이 발발하면 눈앞의 원수부터 죽이겠다'는 말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고, 다른 편에서 경범죄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원과 보위부원은 정치적 범죄가 아닌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눈감아 주는 경향이 있다.¹⁴⁰⁾

139)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120호 (1994.2), pp. 14~17; 126호 (1994.8), pp. 15~16; 교화소 수감자들의 생활실상에 대해서는 145호 (1996.3), pp. 5~11.

140) 김대호(남천화학연합기업소 부직장장), 1996.7.8 면담자료; “풀어지는 감시 체제,” 「중앙일보」, 1995.2.7.

제Ⅲ장 '90년대 변화의 특징: 수동적 적응

'90년대 북한에서는 개혁없는 변화가 일어났다. 국가는 위로부터 주도된 개혁을 통해서 변화방향을 통제할 수 없었다. 중앙계획경제와 국가배급제는 형해화되었고, 비공식경제가 광범하게 확산되었다. 국가는 산하 기업소와 지방 행정 단위에 자구책 마련을 독려했다. 간부와 주민이 더 이상 국가배급과 국가임금으로는 생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비국가부문에서 취업과 수입원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변화는 북한 내부의 정치와 권력 관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북한당국이 경제관리에서 후퇴함으로써 중앙이 하부장악을 위해서 사용하던 핵심적 권력수단이 축소되었다.

이렇듯 '90년대 북한당국은 내부체제의 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미 일어난 변화에 대하여 묵인 정책을 취해왔다. 이를 보면, 북한 당국은 내부변화를 자신의 뜻대로만 통제할 수 없으며, 당국의 대내정책은 이미 일어난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북한체제의 변화에서도 당국의 의도와 정책 목표는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것 이라기 보다는 이미 일어난 변화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적응하는 수동적 성격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원래 의도하지 않았으며 또한 통제하기도 힘든 상당히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북한 당국은 재차 그러한 변화에 적응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각 분야별 변화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각 분야별 특징과 전망

가. 정 치

북한 당국은 '90년대 공안기구의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내 정치 안정에 주력해 왔다. '90년대 경제난 속에서도 북한 당국은 체제유지에 가장 필수적인 부문에 대한 자원공급은 지속했다. 경제에서는 '선행부문,' 엘리트에 대한 국가배급 유지와 함께, 군부, 사회안전부, 국가보위부 등 무력 및 공안기구에 대한 자원 배분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공안부문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여러 폐단은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에서 당-정권기관-보안계통의 엘리트가 해당 지역주민을 통제하고 정치적 안정을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이러한 공안조직이다. 이들 엘리트는 친밀집단을 구성하고 국가강제력을 사적으로 남용하여 일반주민을 지배하고 사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

공안기구는 강화되었지만, 경제난 때문에 국가적 경제관리체계의 하부조직은 붕괴되었다. 현재 여건으로 볼 때, 구 경제체제를 원상으로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먼저 구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이 이미 입증되었으며, 둘째, 북한 당국은 복원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⁴¹⁾ 셋째, 구 경제체제의 복원은 이미 묵인된 하부 단위의 자율성을 파괴해야 한다. 이는 북한 당국이 감당하기 힘든 사회·경제적 저항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

141) 북한은 재원부족으로 1993년 3차 7개년 계획 종료 이후 새로운 인민경제 전망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3차 7개년 계획 종료 이후 북한은 당 중앙위 제6기 21차 전원회의(1993.12.8)에서 3개년의 완충기를 설정했다. 완충기는 1996년에 종료되어야 했지만, 1997년에도 완충기 전략이 지속되고 있다. 통일원, 『'97년도 상반기 북한 경제동향』 (서울: 통일원, 1997), pp. 1~4.

다. 북한 당국은 구 경제체제를 복원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관리체제를 일거에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도 없다. 북한당국은 대대적 개혁정책을 통해 하부체제를 일거에 심도있게 변화시킬 만한 자원 동원능력도 통제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이러한 정책은 대내 정치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것이다.

북한 당국은 구 체제를 복원하지도 않으며, 다소간 극적이고 대규모의 일시적 개혁을 취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기존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정책으로서의 은폐된 점진적 '개혁' 정책을 취해 나갈 것이다. 북한당국은 이데올로기적 이유에서 개혁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회피하면서도, 기존의 변화를 수용하여 점진적으로 공식정책화하는 한편, 공안기구를 강화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사회적 역기능을 통제하는 가운데 현 지배세력의 특권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정치 안정에 주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 당국의 핵심 사안은 변화과정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변화를 창출 또는 허용하는 문제이다.

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정치·경제·사회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통치 엘리트 내부에 변화방향과 관리방법에 대한 다소간 합리적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한 합의는 상층관료와 군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보수-온건 연합이 구성될 때 도출되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세력연합은 변화와 개혁이 초래하는 정치 불안정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며, 정치·사회적 변화가 구 정치제도의 일부를 보존하고 활성화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나아가 가능하다면, 급속한 경제성장과 같은 물질적 성과를 통해 북한 정권의 정치적 정통성이 약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권력 상층부의 단결을 토대로 북한 당국은 대내정치적 안정을 위하여 군사통치방식, 집단수용소, 공개처

형 등과 같은 정치테러의 사용, 김정일 개인숭배와 사상사업을 계속 해 갈 수도 있다. 사회·경제적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는 수동적 개혁 자체는 바로 이러한 정치적 보수성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수동적 적응 정책 자체의 철폐를 뜻하지는 않는다.

나. 경 제

'90년대 개혁없는 변화가 가장 심대하게 일어난 분야는 경제부문이다. 북한은 경제난으로 초래된 중앙정부의 자원동원 능력의 한계에 대해 여러 형태로 적응해왔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 고수, 개혁 반대라는 이데올로기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사실상의 광범한 분권화 현상을 목인했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장려하기도 했다. 자원한계와 경제혼란 때문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축소된 반면, 지방정부와 기업소의 역할은 사실상 확대되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소비재와 식량에 대한 배급제가 사실상 폐기되었으며, 이 결과로 시장관계가 확산되었다. 중앙정부의 경제관리 능력 약화를 계기로, 하부의 지방정부 단위, 기업소 단위,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광범한 창의적 적응과 활용 활동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의 자원 공급 마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의 소비재와 식량이 북한 경제에 공급되었다. 계획경제의 붕괴가 초래한 공백을 비공식경제가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잇점 때문에 중앙정부는 비공식 경제활동을 목인하고, 부분적으로 장려할 뿐 아니라, 일정 부분에서는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90년대의 점진적 변화의 결과로 북한에는 사실상의 이중경제가 성립했다. 아직도 의견상으로 중앙계획경제의 틀이 유지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자원배분, 생산과 판매, 그리고 가격결정에서 광

범위한 분권화가 일어났다. 중앙정부는 경제난과 자원한계에도 불구하고, 군수 중공업, 채취공업, 수출산업 등의 중요 기간산업, 특정 계층에 대한 소비재·식량 배급제의 유지, 이 분야에서 통용되는 국정가격 등을 여전히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관장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이 증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방정부¹⁴²의 역할 증대, 국가계획 이외의 광범한 자원유통, 소비재와 식량 유통을 끼고 발생하는 다양한 소생산과 소상공업의 발전, 농민시장 가격 등이 있다. 중앙정부의 한계는 지방정부와 기업소의 경제적 자율성과 지방정부의 지방경제부흥에 대한 관심제고를 촉진시키고 있다.¹⁴³⁾

앞으로 북한은 '근본적 개혁'을 공표하고 추진하기 보다는 '90년대 묵인되었던 내부경제의 주요 경향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식의 미분적이며 부분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 기조¹⁴³⁾를 유지하는 가운데 ① 소비재·식량 배급제의 공식 폐지와 가격 자유화, ② 농업과 수공업 소상공인의 생산물 자유처분권 인정, ③ 소상공업활동의 공식화와 규칙 지정, ④ 지방행정경제기관 특히, 군행정경제위원회, 그리고 국영기업소의 자율성과 '독립채산' 강화를 위한 분권화와 재정·세계 개혁, ⑤ 국가 생산부문에 대한

142)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의미있는 것인가를 검증해보기 위하여, 이를 오승렬이 제시한 바의 향후 10년간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 방향'과 비교할 수 있다. 그는 북한의 최적 개혁 정책은 3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90년대의 변화는 그가 제시한 제1단계와 2단계 과정의 조치에 미흡하지만 근접하고 있다. 오승렬,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 방향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126~127 참조.

143) 북한은 1998년도 신년사인 당보·군보 공동사설,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새해에 총진군을 다그치자」(1998.1.1, 평양방송)에서 무역제일주의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경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이 핵심으로 강조되었다. "농업과 석탄공업, 전력공업과 철도운수, 금속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고 우리 인민이 피땀으로 건설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는 것은 현시기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가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경공업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의 경공업제일주의 방침 관철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더 많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했다.

국정가격, 비국가생산부문에 대한 시장가격 적용의 이중가격제 실시, ⑥ 점진적인 북한 원화의 평가 절하, ⑦ 화폐 회수를 통한 긴축정책 등을 추구할 것이다.¹⁴⁴⁾

이와 같은 조치들은 이미 관행화된 것을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나, 관련 경제행위자들의 자율적 경제행위는 급속하게 증대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무엇보다도 식량·소비재의 생산과 유통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기간산업인 에너지, 원료, 채취산업, 중화학 공업 분야 등에서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유입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관리정책이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식량·소비재의 생산과 유통 분야에서는 '90년대처럼, 국가재산 절취 등과 같은 국가수입과 국가기강에 악영향을 주는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본보기적 단속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무해한'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해서 대체로 방임정책을 취할 것이다. 또한 이미 '90년대에 나타났듯이, 국가는 정치적으로 '무해한' 비공식 경제활동에 조정차원의 개입을 점차적으로 강화하며, 여러 형태의 조세 수취를 통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수동적 적응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환경이 안정적·우호적이어야 하고, 미진하나마 꾸준히 경제성장을 유발시켜야 하며, 국내정치 안정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남북간의 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남북한 당국자간의 대화에 의한 경제관계의 제도화는 대내외에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안정성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이 남한이나 서방국가들

144) 1997년 정장시 북한 농업위원회 국장은 북한이 향후 채소류, 과일류, 잡곡류의 가격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소규모 농산물 시장을 활성화해 농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농산물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1997.11.26.

로부터 경제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¹⁴⁵⁾ 또한 북한 경제개혁의 진행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거시경제 불안정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의 협력과 남측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다. 사 회

'90년대 북한의 변화 중 사회분야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새로운 계층구조의 발생이다. 과거에는 국가가 정치적으로 설정하고 조종하는 위계구조, 배급체계, 임금구조 등에 의하여 북한의 계층 구조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경제난에 따라 국가는 자원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더 이상 과거의 위계구조를 기댈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부패, 개인장사 등의 일탈행위가 증대하면서, 비국가부문에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취업기회와 수입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90년대 북한에서는 국가가 사회계층 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다양한 경제적 유인을 통해 정치적 지배집단이 새로운 경제적 특권집단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간부가 부패행위를 통해서 정치·행정적 권력을 경제적 자산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 현상이다. 이를 통해 암시장 경제와 간부의 공공권력 유착이라는 새로운 북한식 '정경유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암시장 거래를 중심으로 한 지하경제와 공공권력은 공생관계를 유지한다. 이 때 당정관료체에서의 직위에 따라서 지하경제에서 누릴 수 있는 기회의 가능성도 얼마간 서열화되어 있다. 당정간부와 불법

145) 오승렬,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 방향 연구」, p. 128.

적 경제활동간 관계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있다.

첫번째 유형은 당정의 고위 간부와 거대 지하경제인의 결합이다. 상당한 규모의 재화를 유통하고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당정 고위간부의 협력과 목인이 불가결하다. 따라서 거대 지하경제인은 당정고위 간부 출신이거나 그 대리인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하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상당한 비율의 이익이 당정 고위간부에게 돌아간다. 양귀비 대량재배 및 아편생산과 밀수출, 중고 자동차 중국 수출 등 상당한 조직력과 자금이 필요한 사업은 고위급 간부와 전문 지하경제인이 결합할 때에만 가능하다.

두번째 유형은 중급 당정 간부와 소규모의 사적 거래인, 전문 지하경제중사자 등의 결합이다. 이들은 국영상점이나 상업관리소 취급 물품을 국정가격으로 대량 빼돌려 암시장에서 판매한다. 이러한 활동 역시 중간급 당정 간부의 목인과 협력없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익금의 일부가 후자에게 뇌물로 전달된다. 중간급 간부는 다시 상급간부와 연계되어 있다. 하급 당정관료들은 상급 관료들의 후원을 받는 것이 자신들의 위치를 고수하는 데 유리하다. 하급 관리들은 만약 비리가 노출되더라도 후원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저없이 불법 거래에 개입한다.¹⁴⁶⁾

마지막으로 비공식경제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일반주민과 당정간부와의 관계이다. 대부분의 일반주민은 불법적 또는 반합법적 비공식경제활동을 통하여 소소한 소득을 올려서 가계에 보태고 있다. 불법자재를 사용한 소규모 수공업적 생산, 공장에서의 소소한 도둑질, 상점점원의 물건 빼돌리기 등이다. 이러한 활동은 당국의 정책에 따라,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해당 당정 간부의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묵

146) 김영운, "북한 암시장의 경제·사회적 영향,"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p. 211.

인 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에 종사하는 일반주민은 뇌물을 통하여 처벌을 피해보고자 하지만, 종종 국가와 간부의 자의적인 법집행의 피해자가 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도, 현재 북한 정치의 안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다. 국가가 처분할 수 있는 자원이 감소했고, 간부와 주민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약화되었지만, 간부와 주민은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기존의 권력체제와 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생계와 축재를 위한 불법적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묵인, 당정간부의 개입과 협력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모든 활동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아직 효율적이며, 불법 활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고, 또한 아직도 상당 부분의 경제자원이 국가의 처분권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북한에서의 사회계층적 변화현상은 개혁과 변화를 향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부패행위를 통하여 중·상층 간부가 경제적 특권집단화하는 현상은 북한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당정관료는 시장관계의 확산과정이 만들어 내는 은밀한 재산형성 기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적 영역과의 관계를 심화한다. 이를 통해 간부는 자산가로 변화하며 사적 영역의 존속과 확장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시장개혁을 강력히 옹호하는 세력으로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¹⁴⁷⁾ 장기적으로 이러한 해결방식은 사기업가와 구 당정관료로 구성된 강력한 민간 개혁연합을 형성할 수도 있다.¹⁴⁸⁾ 또한 개혁과 변화의 과정에서 국가는 사회경제에 대한 간섭을

147) Minxin Pei, *From Reform to Revolution: the Demise of Communism in China and the Soviet Un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이와 유사한 동유럽에서 '노멘클라투라 사유화'에 의한 '정치적 자본주의화'에 관해서는 Jadwiga Staniszkis, *The Dynamics of the Breakthrough in Eastern Europe. The Polish Experien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pp. 31~74 참조.

148) 동유럽 지도엘리트의 다수가 스스로 사회주의를 포기하게 된 이유를 이렇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어, 주민의 이동, 취업가능성, 정보유통 등과 관련하여 개혁 이전 시기의 통제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자각한 최고지도부는 과거 국가가 관장하던 사회·경제적 행위를 사회로 이양할 수 밖에 없다. 과거 국가가 제공했던 공공용역과 이익이 사회에 대한 통제수단이었던 것만큼, 이러한 용역의 감소는 국가가 사회에 대한 통제 수단을 상실한다는 것을 뜻한다.

2. 수동적 적응의 역동성

가. 점진적 체제전환의 가능성

만약 현 집권세력이 수동적 적응정책을 지속하고, 변화과정에 대한 통제능력을 유지하면서 정치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면, 북한은 점진적인 체제전환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점진적 체제전환은 집권세력의 마스터플랜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 이미 기정사실화된 사회·경제적 변화와 상황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적응하는 미봉적 정책을 지속해가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개혁도 마스터 플랜에 의하여 지도된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수동적 적응의 사후적 총합으로서 발생했다. 이러한 변화에는 일련의 특징이 존재한다. 만약 앞으로 북한의 수동적 적응 정책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특징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수동적 적응으로서의 은폐된 개혁이 부분적이고 시험적인 조

게 설명하는 논의로서 Ivan Szelenyi and Balazs Szelenyi, "Why socialism failed: Toward a theory of system breakdown: Causes of disintegration of East European state socialism," *Theory and Society*, Vol.23/2 (April 1994), pp. 211~232 참조.

치들의 연속과정으로서 진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개혁은 경제구조를 일거에 수정하고자 하는 '근원적 개혁'이 아니라, 직면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인 미봉조치의 누계로서 일어난다. 이러한 개혁에는 전과정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마스터 플랜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점진적 개혁도 뚜렷한 목표와 확고한 청사진에 기초하여 취해진 정책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시험적인 조치의 연속으로 이어졌다.¹⁴⁹⁾ 또한 중국의 개혁은 중앙에서 보수파와 개혁파간의 충돌과 권력투쟁 과정에서 발생했던 우연한 시행착오의 결과였다.¹⁵⁰⁾

둘째, 공식화된 정책도 변화 과정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중앙정부가 전체 체제의 변화과정을 의도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¹⁵¹⁾ 수동적 적응으로서의 점진적 개혁은 중앙이 개혁의 의도를 하부단위에 강요하는 방식으로 취해지지 않고, 이미 묵인되어 온 관행과 욕구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나, 과거 조치가 초래한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을 처리하기 위한 미봉적 조치의 과정이다. 북한은 '90년대 들어서 과거에 이데올로기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간주되었던 많은 변화를 허용했으며 여러 단위의 경제주체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중국에서도 중앙정부는 기존의 집단농업에

149) Barry Naughton, "What is distinctive about China's economic transition? State enterprise reform and overall system transformation,"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18, No.3 (1994), pp. 472~473; Thomas G. Rawski, "Implications of China's Reform Experience," in Andrew G. Walder, ed., *China's Transitional Econom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 189~190.

150) Jeffrey Sachs and W. T. Woo, "Understanding the Reform Experiences of China, Eastern Europe and Russia," Ching H. Lee and Helmut Reisen, eds., *From Reform to Growth: China and other Countries in Transition in Asia and Central and Eastern Europe* (Paris: OECD, 1994), pp. 31~33.

151) Rawski, "Implications of China's Reform Experience," pp. 188~202.

서 가족 농업으로의 전환 요구를 사후 승인했을 뿐이지, 그 변화를 주도하지는 않았다. 공업 개혁에 있어서도 중앙정부는 국영기업에 대한 통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했을 뿐이다. 생산계획은 철폐되지 않았지만, 포괄하는 범위가 점점 좁아졌다. 하부단위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접근 방법에 대해 창조적으로 대응했으며, 기대 이상의 결과를 산출했다.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은 체제 변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전체 사회·경제적 변화라는 복잡한 역동체의 일부에 불과하다.

셋째, 중국의 개혁 경험은 적절한 인센티브 구조가 제공된다면, 지방행정단체와 국영기업도 상당히 효율적인 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¹⁵²⁾ 북한은 '90년대 들어서 기업소와 지방단위의 자율성과 경영인센티브를 향상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이러한 조치가 발전한다면, 북한에서도 소유구조의 근본적 변화없이도, 경영 내용상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중국에서 지방경제의 발전은 관료적 네트워크 구조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사유화를 통하지 않고서도 상당한 정도로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중국의 재정개혁은 지방세 수입 중 지방행정단체 보유분을 명확히 하면서, 지방에 잉여분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러한 개혁은 지방정부의 예산제약을 경화시켰으며, 지방정부 스스로가 경제행위의 위험을 지게 했다. 지방정부는 자신의 영역안에 있는 지방기업들을 지방단일기업의 산하 기업으로 취급했다. 지방관료는 지방단일기업의 이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지배인 역할도 했다. 이러한 지방단일기업의 최고 책임자는 지방당 책임비서였다.

이와 같은 수동적 적응 과정은 계획경제에 시장적 요소를 점진적

152) Jean C. Oi, "The Role of the Local State in China's Transitional Economy," in Walder, ed., *China's Transitional Economy*, pp. 170~187.

으로 허용하며, 이데올로기의 중요성과 당의 권위에 기초한 정치적 간섭을 점차로 감소시키게 된다. 수동적 적응의 누적에 의한 '무의식적' 진화를 통해 폐쇄된 공산주의정권은 시장경제에 기초한 권위주의적 정권으로 변화할 수 있다. 그런데 수동적 적응은 전체 경제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차원의 개혁에 한정된다. 집권세력은 민주화를 위한 어떠한 의미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델에서는 기술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 정권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국가, 지방행정 단체, 집단소유경영체 등이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차원에서 허용된 변화는 국가의 내부 권력 체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정권이 의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억제하고자 했던 정치적 변화를 야기한다.

나. 국가권력의 이완과 제도체계의 분권화

'90년대 경제·사회적 변화는 이미 북한 내부의 정치와 권력관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만약 북한 당국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선에서 수동적 적응 정책을 수행해 간다면 그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된다.

앞으로도 북한 당국은 대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점진적인 분권화와 시장관계의 확산을 공식정책에 반영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추가잉여는 중앙에 집중되어 기존의 권력관계와 정치제도를 재차 강화시켜야 한다. 경제잉여 생산능력이 향상되고 중앙에 집중하는 경제잉여의 절대량이 증대하는 경우, 이와 같은 정책은 일차적으로 성공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성 증대를 통해 구권력관계를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과

정에서 북한당국은 모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 당국이 과거에 독점해 왔던 경제적 자원과 정치·행정적 권위는 점진적으로 하부단위에 이양되어야 하며(분권화), 각 단위의 자율적 조율에 맡겨져야 한다(시장화). 이와 같이 당국이 경제관리에서 불가피 후퇴함으로써, 중앙이 하부장악을 위해서 사용하던 핵심적 권력수단이 줄어들어 간다. 중앙이 하부단위로 자원관리권을 이양함으로써, 하부단위의 중앙에 대한 의존관계가 약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간부-주민 사이, 국가-기업-지방 사이의 권력관계에 변화를 초래한다. 이미 '90년대에 부분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앞으로도 수동적 적응 과정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먼저 국가-간부-주민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변화가 나타난다. 우선, 비공식부문에서 경제행위가 가능해지면, 일반주민은 국가부문 바깥에서 독립적인 수입원천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반주민이 국가 또는 간부에 의존해야 하는 필요성이 약화된다. 둘째, 하급자는 수입과 취업을 위하여 공식부분에서 상급자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왔다. 그러나 비공식 부문에서의 불법적 활동을 위해서 상급자가 하급자의 협력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증가한다. 셋째, 비공식부문은 당간부에게도 새로운 수입원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들은 상급자의 명령에 대하여 덜 복종적이게 되며, 일반주민에게 중앙당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강요하고 감시하는 역할에도 덜 흥미를 느끼게 된다. 넷째, 이러한 독립적 경제활동 영역은 공산주의 정권이 당조직을 통해서 공공기관에 설치해 놓은 감시 영역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당기구와 당원을 통한 정치적 간섭이 불가능하다. 다섯째, 국가부문 바깥에서도 소득원과 취업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간부와 주민 모두는 그들의 상급자와는 다른 집단 정체성과 이익을 발전시킬 수 있다. 새로운 소득기회에 참가하고 있는 하급간부는 보다 정통적이며 보수적

인 중앙의 정책에 저항하거나 회피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일반주민은 경제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하여 당간부 및 국가와는 상이한 인식을 발전시킨다. 비공식 부문의 정치적 효과는: 이 부문의 규모가 크고, 공적 영역에 비교하여 이 부문의 수입이 높을수록 증대한다.

국가-기업소-지방 사이의 관계변화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로부터 자원공급이 불규칙해짐에 따라 국영기업소 지배인과 지방행정책임자는 위로부터의 세세한 계획명령과 정치지침을 준수할 능력과 의지가 감소한다. 더욱이 양자는 산하 노동자와 주민에게 정치적 복종과 세뇌를 강요할 능력과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 때문에 초래되고 있다. 첫째, 기업소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국가 통제가 약화된다. 그 이유는 경제난 때문이 계획경제체제와 국가배급제가 붕괴하여 국가의 기업소에 대한 자치보장, 판로확보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소는 운영자금과 투자자본에서 국가에 덜 의존하게 되며, 점점 자체조달 방식을 모색하게 된다. 기업소는 점차 계획 외적인 생산과 판매를 통하여 자치를 조달하고 소비품을 확보하는 사업에 주력하게 된다. 중앙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방관청 역시 자체 수입원을 개발하게 된다. 셋째, 계획기능의 마비에 따라 기업소간의 자재거래, 지역간 소비재거래는 국가통제와 국영가격에서 점점 멀어진다. 기업소간 자재거래는 수요공급의 법칙의 영향을 받는 기업소간 물물교환 형태를 강화해 간다. 소비재 거래에서 화폐의 중요성, 특히 외환의 중요성이 증대한다. 넷째, 기업소와 지방 단위에서 자체 수입원과 자체적으로 확보된 자산에 대한 '소유'의식이 증대한다. 이에 따라 기업소 이익금이 대한 국가통제능력이 약화된다. 다섯째, 배급제 붕괴, 암시장 가격의 폭등때문에 노동자의 임금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기업소에서 노동규율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곧 중앙과 하부단위, 그리고 사회간 힘의 관계의 재편을 의미한다. 가장 의미있는 변화는 우선 국가기구 내에서 각 단위 간 권력관계의 변화로서 나타난다.¹⁵³⁾ 수동적 적응에 의한 점진적 개혁이 각급 관료체 주도의 보다 분권화된 경제성장과 경제인여관리를 지향하기 때문에 증대된 성과는 관료체 내부의 각급 단위에 분산적으로 재분배된다. 이 과정에서 중앙이 하부단위에 행사할 수 있는 복종과 규율의 수단과 방식이 영향을 받는다. 물론 하부 단위가 여전히 전체 관료체의 일부이며, 아직도 중앙에 남아있는 자원과 권위의 처분권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점차 하부단위의 자율성이 증대한다. 개혁이 상당 기간 동안 진전되기 이전에는 '사회' 영역으로 이양되거나, '사회'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하는 자원의 양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다. 정치적 통제능력의 약화

수동적 적응이 계속되면, 정치적으로 북한 당국은 점차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효과와 상황강제에 직면하게 된다. 국가는 여전히 상당한 통제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통제능력은 점차로 약화된다.

153) 이러한 견해는 개혁과정의 정치적 역동성을 주로 국가-사회간의 세력관계 변화를 축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의견과 대비된다. 국가 기구내부의 세력관계 변화를 강조하는 견해로는 Andrew Walder, "The decline of communist power: Elements of theory of institutional change," *Theory and Society*, Vol.23/2 (April 1994); Steven M. Goldstein, "China in Transition: The Political Foundation of incremental Reform," in Walder, ed., *China's Transitional Economy*, p. 164; 국가-사회 간의 세력관계의 변화를 주축으로 한 견해는 Minxin Pei, *From Reform to Revolution. The Demise of Communism in China and the Soviet Un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장경섭, "중국의 개혁: 편파적 시장화와 계급갈등,"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 49~80 참조.

그 이유는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니부적 억압을 완화하고 사회적 통제를 약화시켜야만 하는 상황강제가 발생하며, 국가 행정체계와 간부의 규율이 이완되기 때문이다.

분권화와 시장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중앙의 하부단위에 대한 통제능력과 사회에 대한 통제능력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당국이 강력한 공안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국가행정조직과 국유기업에 대한 광범한 인사권을 행사하며, 분권화와 시장화의 도입여부, 범위, 방향 등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동적 적응과정에서 북한당국은 선택적인 분권화와 시장화를 통해서 하부단위의 이해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¹⁵⁴⁾ 수동적 적응정책은 다양한 산업, 지역, 직업 사이이 불균등하게 추진되고 실현된다. 이에 의해서 각 분야마다 국가간섭의 철회와 시장화의 양상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기업, 지방정부 등 하부관료 단위의 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여러 정책선택과 인사권 활용을 통해 중앙권력은 관료체제 내부에서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에서 충성세력연합을 조장하거나 반대세력연합의 형성을 방지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중앙과 하급단위 간에 새로운 성격의 의존관계가 성립한다. 구 사회주의 경제관계와 비교할 때, 변화된 체제에서는 중앙의 자원과 권위에 대한 처분권이 축소되기 때문에 중앙과 하급단위 간의 관계는 상당히 '민주화'된다.¹⁵⁵⁾ 중앙과 하급단위간의 관계는 엄격한 명령-복종 관계로부터 보다 복잡한 협상과정과 이익거래의 관계로 변화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의 정책 결정

154) 중국의 경험에 관해서는 장경섭, 위의 책 참조.

155)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474~512.

에 영향을 끼쳐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관료계선별, 또는 지역단위별 파벌형성이 촉진된다.¹⁵⁶⁾ 이러한 파벌은 상급단위로부터의 특혜를 목적으로 하는 관료 집단 내부의 유착관계가 중심이 되고, 관료와 민간 행위자간의 유착관계는 부차적으로 되어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관료체제의 관할하에 놓여 있으며, 그에 비해 민간 주체에 의한 독자적 경제활동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수동적 적응은 보존하고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핵심적인 국가제도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¹⁵⁷⁾ 새로운 상황은 기존의 국가제도도 변화할 것을 강요하지만, 이들은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¹⁵⁸⁾ 구체제하의 중앙집권적이며 위계적 제도들은 동원 과 통제라는 조건에서는 비교적 잘 기능하지만, 체제변화 과정이 보다 분권화되고, 경쟁적인 조건에 적응하는 데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또한 시장관계가 확대하면 국가적 경제관리체제가 필요로 하던 당-국가 하부조직은 대부분 쓸모없게 된다. 나아가 시장관계의 확대는 정부와 당 관료에게 손쉬운 축재기회를 제공한다. 중국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관료적 관리와 시장관계가 혼합된 경제상황은 정치권력을 경제적 이득으로 변환시키며, 국가재산을 사적으로 횡령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적 부패가 상당히 증대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국가제도체계가 공적 지지와 정당성을 상실할

156) 중국의 경험에 대해서 Thomas Heberer, *Korruption in China: Analyse eines politischen ökonomischen und sozialen Problems*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91), pp. 90~152.

157) 중국의 경우 이데올로기와 당의 약화에 대하여, Gordon White, *Riding the Tiger: The Politics of Economic Reform in Post-Mao China* (London: MacMillan, 1993), pp. 147~197.

158) Pei, *From Reform to Revolution: the Demise of Communism in China and the Soviet Union*, pp. 65~66; Barret McCormick, *Political Reform in Post-Mao China: bureaucracy and Democracy in a Leninist Stat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위험이 매우 크다.

이러한 가운데서 북한의 정치·사회적 기강이 지속적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국가 행정체계 내부에서 상당한 분권화가 발생했으며, 관료의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국경무역의 증대, 벌목공, 유학생 등을 통한 외부정보 유입이 증대하고 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안기구를 각화하며 공개처형과 같은 정치적 테러 수단을 사용하게 될 것이지만, 북한은 대내정치적으로 과거와 같은 '유일체제'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배급체계가 붕괴된 상태에서 대부분의 간부는 부패를 통해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일반 주민도 국가재산 절취와 각사를 통해서만 생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난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빈곤과 사회적 일탈행위의 만연을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Ⅳ장 결 론

‘개혁불가’라는 이데올로기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사회·경제적 위기는 북한의 내부통치와 경제관리실태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앞으로도 북한은 ‘개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내부체제는 계속 변해갈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를 보면, 이데올로기적으로 천명된 공식목표와 실제로 일어난 내부체제의 변화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90년대 북한의 특징은 개혁없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 북한당국은 내부체제의 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미 일어난 변화를 수용하면서 묵인하는 정책을 취해 왔다. 향후에도 북한당국은 대대적인 ‘근본적 개혁’을 시도하기 보다는 이미 일어난 변화에 대응하고 수용하는 수동적 적응정책을 펴게 될 것이다.

북한체제는 그 성립 이후 조직과 운영면에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왔으며, 북한당국은 여러 조치를 통해서 이에 대응해 왔다.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이 하부를 장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두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했다. 첫째, 중앙관리경제가 비교적 제대로 기능해야 한다. 북한 당국은 중앙집권적 자원배분과 중앙관리경제체제를 통해서 모든 하부단위의 행위를 조종하고 조율할 수 있었다. 둘째, 하부 장악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는 데 충분한 만큼의 경제잉여가 생산되고, 이를 중앙에 집중시켜야 한다. '90년대 북한의 경제난은 이러한 두가지 전제의 붕괴를 초래했다.

경제난 때문에 북한당국은 각급 공장·기업소의 경영활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국가계획위원회 산하 중앙자재연합상

사로부터의 자재공급체계가 붕괴했다. 그 이후 자재조달은 각 공장·기업소의 자체 해결에 맡겨지고 있다. 북한 정부는 도·시·군의 지방 행정 단위와 지방산업 공장들이 자구책을 모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새로운 무역체제'를 도입하여 무역 전담부서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부서와 지방경제기관들도 무역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각 생산 및 지역 단위는 생존을 위해서 독자적인 외화벌이 사업을 구상하여, 각개 약진식으로 대외무역에 뛰어들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은 그간 중간간부와 일반주민에 대한 가장 효율적 통제기구 중 하나였던 국가에 의한 소비재 및 식량의 독점적 배급체계를 붕괴시켰다. 배급제의 붕괴와 함께, 중앙계획기구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 부문의 경제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주민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 왔다. 무엇보다도 국가로부터 받는 임금은 두가지 측면에서 무의미해졌다. 먼저 공장 가동율이 저하되면서 정상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대부분 노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국정가격의 무용화, 암시장 가격 폭등에 따른 인플레이 현상 때문에 국가가 지급하는 공식임금의 실질가치가 급속히 저하했다.

암시장 인플레이와 국가임금의 의미상실은 간부나 일반주민을 막론하고 모든 주민에게 심각한 실질소득 감소를 뜻한다. 이는 북한 모든 계층의 생존방식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모든 계층은 국가부문 이외의 영역에서 호구지책을 마련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모든 주민 계층이 국가적 규범과 규율에서 이탈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생활에 대한 국가 규제의 형해화, 공적 영역의 공동화(空洞化)가 심화되어, 그 결과로 국가제도의 현격한 기능저하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사회 전반에서 정치·사회적 기강이 붕괴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90년대 위로부터 주도된 적극적 개혁은 없었지만, 북한은 계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향후 북한은 중앙관리경제와 식량·소비재 국가배급 체제를 전면적으로 복원시킬 수도, '근본적 개혁노선'을 채택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 대신에 북한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개혁'이라는 용어 사용을 회피하면서도, 이미 일어난 변화를 점진적으로 수용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북한당국의 이러한 시도는 외부 여건과 내부통제능력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점진적·수동적 적응은 경제부문에서 뚜렷히 나타날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도 주요 기간산업과 수출산업, 권력유지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특관계층에 대한 국가 배급체제는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국가관리를 상당한 정도로 후퇴시키는 정책을 점차로 더욱 분명하게 공식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이데올로기와 형식상의 국가는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중앙의 공식통제는 이미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형해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적응해야만 하는 중앙정부는 기업소 경영에 대한 부분적 통제정책을 점진적으로 공식화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지방행정관청의 자율성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일반 주민에 대한 식량·소비재 공급은 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 관계에 위임할 가능성이 많다.

대내정치는 보수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북한 당국은 이미 발생한 경제관리체제상의 변화를 수용하는 선에서 분권적, 시장경제적 요소를 점진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그로부터 발생하는 정치적 위협을 공안통치를 통해서 제어하고자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부문의 변화에 대한 방임 정책 및 소극적 대응과는 달리, 정치적 차원에서는 독재체제의 그 어떤 이완도 거부하는 완고한 정책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적 적응정책도 국가통제를 벗어난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시장관계의 증대에 따라 간부부패가 증대하며, 사회의 계층적 분화가 심화되며, 대외사조의 유입이 확대되고, 일반 주민의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약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가 직접적으로 장악하는 부분이 줄어들어 통제능력이 약화되는 한편, 정치불안의 가능성이 증대한다. 만약 시장관계의 묵인과 확대가 경제성장을 유발하여 국가재정수입이 증대하고 주민 생활이 개선될 수 있다면, 정치적 불안정은 통제될 수 있는 한계내에 머무를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북한 내부에서 정책노선을 둘러싼 엘리트 내부의 균열 또는 독재체제에 대한 주민의 집단적 저항 때문에 정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고영환. 「평양25시」. 서울: 고려원, 1992.
-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김연철.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1997.
- 내외통신. 「내외통신종합판(46) (1992.7.1-12.31)」. 서울: 내외통신사, 1993.
- 내외통신사. 「북한실상종합자료집」. 서울: 내외통신사, 1995.
- 동용승·서양원. 「남북경협」.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5.
- 리기성.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사회주의 경제의 전반적 영역에서 작용하는 경제 법칙과 범주 제1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북한문제연구소. 「최근북한실상」. 서울: 북한문제연구소, 91.8~97.11.
- 사회과학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경제리론해설」.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5.
- 서재진. 「북한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이중석. 「북한의 경제난 실태와 전망」. 서울: 세종연구소, 1996.
- 전홍택·김상기. 「북한경제의 현황과 개혁전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7.
- 조명철. 「북한가격정책의 현황과 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 통일원. 「'97년도 상반기 북한경제 동향」. 서울 통일원, 1997.
- 한국개발연구원. 「1995년도 북한경제동향」.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6.
- 한국은행. 「북한 각년도 GNP 추정결과」. 서울 한국은행, 각년도.
- Walder, Andrew. ed., *China's Transitional Econom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McCormick, Barret. *Political Reform in Post-Mao China: bureaucracy and Democracy in a Leninist Stat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 Lee, Chung H. and Helmut Reisen. eds., *From Reform to Growth: China and other Countries in Transition in Asia and Central and Eastern Europe*. Paris: OECD, 1994.
- White, Gordon. *Riding the Tiger: The Politics of Economic Reform in Post-Mao China*. London: MacMilan, 1993.
- Staniszki, Jadwiga. *The Dynamics of the Breakthrough in Eastern Europe. The Polish Experien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Pei, Minxin. *From Reform to Revolution: the Demise of Communism in China and the Soviet Un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 Heberer, Thomas. *Korruption in China: Analyse eines politischen ökonomischen und sozialen Problems*.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91.

2. 논문

- 김영국. “학교다닐 때부터 장사했다.” 귀순자 쟁점대담 10. 『통일한국』. (1996년 11월호).
- 김영운. “북한 암시장의 경제·사회적 영향.”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 _____. “북한 에너지 난의 실상과 전망.”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11.1.
- 김종현. “북한 속도전 청년돌격대.” 귀순자 쟁점대담 20, 『통일한국』. (1997년 11월호).
- 김호림. “‘사라요’ 소리 울려퍼지는 나진·선봉 장마당.” 『통일한국』. (1997년 11월호).
- 리신호.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 특징과 그 우월성.” 『경제연구』. (1992년 제4호).
- 박형중.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문화.”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배인수. “외화별이사업 과열로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귀순자 쟁점대담 8. 『통일한국』. (1996년 9월호).
- 서남일. “계획은 없다. 흥정을 잘해야 공장이 산다.” 귀순자쟁점대담 5. 『통일한국』. (1996년 6월호).
- _____. “노임은 받으나 마나 장사해서 먹고산다.” 귀순자 쟁점대담 6. 『통일한국』. (1996년 7월호).

- 손철준.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 「경제연구」. (1992년 2호).
- 송문홍. “사회주의요? 팍 썩은 뇌물천국이야요.” 「신동아」. (1994년 2월호).
- 오명선. “형식은 사회주의, 내용은 자본주의의 같다.” 귀순자 쟁점대담 7. 「통일한국」. (1996년 8월호).
- 장경섭. “중국의 개혁: 편파적 시장화와 계급갈등.”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전홍택. “북한 제2경제의 성격과 기능.” 「통일경제」. (1997년 2월).
- 정성산. “군 선전사업 목적은 병사들의 사기진작.” 귀순자 쟁점대담 14. 「통일한국」. (1997년 5월호).
- 최수영. “북한 식량난의 실상과 전망.”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최주환. “군간부 승진의 기준은 충성심.” 귀순자 쟁점대담 14. 「통일한국」. (1997년 1월호).
- _____. “군부엘리트의 정치학습: 경제 어려워지면서 군사기강 문란해졌다.” 귀순자 쟁점대담 13. 「통일한국」. (1997년 2월호).
- _____. “북한 인민군 보위사령부의 체계 및 활동.” 「북한조사연구」 제1권 1호. (1997).
- Amnesty International,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North Korea), Public Executions: Converging Testimonies,” AI INDEX: ASA 24/01/97 (January 1997).
- Walder, Andrew. “The decline of communist power: Elements of theory of institutional change.” *Theory and Society*, Vol.23/2. (April 1994).
- Naughton, Barry. “What is distinctive about China’s economic

- transition? State enterprise reform and overall system transformation.”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18, No.3 (1994).
- Szelenyi, Ivan. and Balazs Szelenyi, “Why socialism failed: Toward a theory of system breakdown: Causes of disintegration of East European state socialism.” *Theory and Society*, Vol.23/2. (April 1994).
- Oi, Jean C. “The Role of the Local State in China’s Transitional Economy.” in Andrew Walder. ed., *China’s Transitional Econom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Sachs, Jeffrey and W. T. Woo, “Understanding the Reform Experiences of China, Eastern Europe and Russia.” in Chung H. Lee and Helmut Reisen. eds., *From Reform to Growth: China and other Countries in Transition in Asia and Central and Eastern Europe*. Paris: OECD, 1994.
- Goldstein, Steven M. “China in Transition: The Political Foundation of incremental Reform.” in Andrew Walder. ed., *China’s Transitional Econom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Rawski, Thomas G. “Implications of China’s Reform Experience.” Andrew G. Walder ed., *China’s Transitional Econom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 189~190.

3. 기 타

「로동신문」

「민주조선」

「조선시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最近 發刊資料 案内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의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강안 해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곽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의	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현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著	7,000원
97-04 中·北關係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著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외共著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共著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著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著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 정책	홍용표	著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著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著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기금순	著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著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함병덕	著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著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著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제	함영태	著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著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著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박태환 최현준 기성호외	共著	10,000원
		1996		
		박태환 최현준 기성호외	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7,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6,000원
97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7~1998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0,0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統一研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 (1996)</i>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6 (1997)</i>	9,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 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 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 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전화: 901-2559, 901-2604, FAX: 901-2547)

